



기본 | 18-20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Growth, Stability, and Inclusion in Regions

홍사흠 외

기본 18-20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Growth, Stability, and Inclusion in Regions

홍사흠 외

■ 연구진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다윗 국토연구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김동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변필성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이경재 국토교통부 서기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시군구 단위의 소득통계를 활용하여 포용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공간적 분리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저성장 지역에서 소득불평등-공간분리사이의 관계가 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저성장시대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
- 3 결정요인 분석결과 산업 및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지역 포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시사점)

- 1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 2 공간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융합된 포용 정책 수립 필요

(지역 포용 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

- 3 다각적인 지역 소득지표를 활용한 빈곤계층 및 취약공간 선별
- 4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생활 최저기준 도입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 5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예: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확대 도입 등)
- 6 지역 소득증대를 통한 포용성 제고 (주민주도 사업 및 유흥자산 공유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
- 7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 (지역별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등)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공식적인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 중
- 공간적 배제와 포용성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경제적 격차 사이의 밀접한 연관을 감안할 때 공간단위에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
- 즉,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 경험적으로 포용성을 진단·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비공간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어온 소득격차를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측정하고 실증분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함
-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소득불평등과 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로 인식하여 측정
- 측정된 지역경제 포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성과 및 지역의 특성과 같은 결정요인을 선별
- 지역 포용성 정책 수립 및 제고를 위한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지역 포용성 진단에 사용된 개인소득 마이크로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
- 지역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 시군구 내 읍면동 수준에서의 공간적 분리 등과 관계된 지수들을 지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관

계 및 결정요인의 영향을 상관분석, 경로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분석

□ 연구의 기대효과

- 지역 포용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실험하고 근거를 관찰
- 기존에 시도된바 없는 지역 소득 자료의 활용을 통해 공간에서의 소득격차, 분리 등의 현상을 분석하여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2.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 포용성과 포용성장

- 포용성은 다양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
- 동시에 불평등한 구조 개선을 통해 배제를 완화·극복하는 과정이자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
- 포용 성장은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이익의 개인적·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노동에 대한 기회를 높여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

표 1 | 주요 국제기구의 포용성장 개념

국제기구	포용성 및 포용 성장 개념
World Bank (2009)	- 포용이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또 다른 성장의 방식을 의미함 - 기존의 공유성장개념은 소득분배만을 강조. 반면에 포용 성장이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와 균등한 배분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주장
ADB(2011)	- 포용이란 공간적 포용을 의미 - 도심 내 슬럼가의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거주민의 접근성 향상
OECD(2014)	- 포용이란 그동안 도외시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성장의 방식 -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육과 의료 같은 소득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역들을 고려하는 성장방식

자료: 문정호 외 (2016, p. 19) 재인용

□ 포용성의 공간적 함의

- 포용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며, 공간적 포용(배제) 현상의 작용으로 인해 지역 내 경제적 차별이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
-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지역 내 공간적 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현상의 고착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집중된 공간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정보나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기회 불균등의 심화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 존재

그림 1 | 소득격차, 공간분리, 경제적 활동 제한의 상호작용



□ 포용성과 지역경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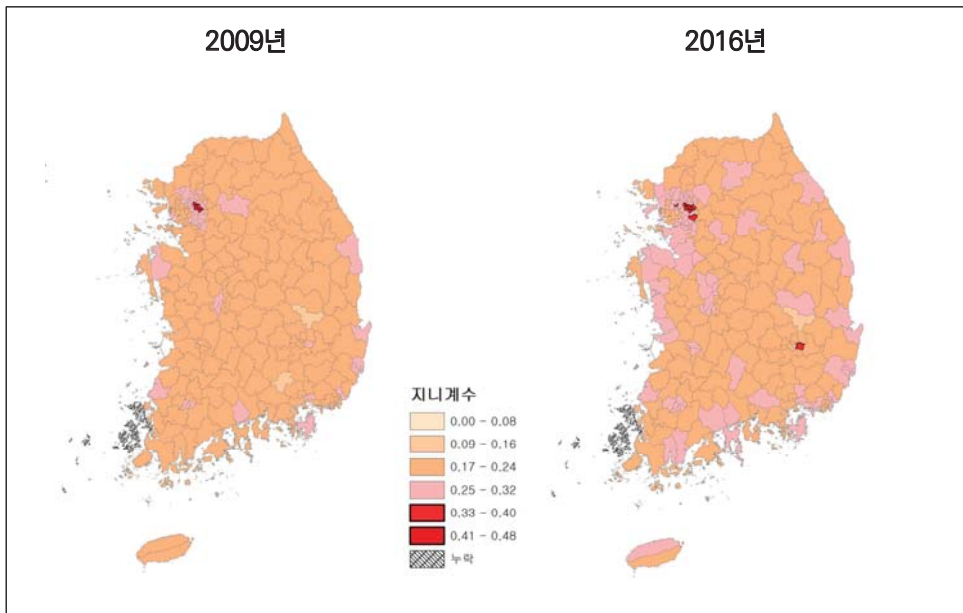
- 성장이라는 과실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나누어지는 과정이 소득 분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성장과 안정과 같은 지역의 경제적 성과 속에서 소득 중심의 포용성이 이해되어야 할 필요
- (성장과 포용) 경제적 수혜의 분배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성장, 즉 규모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빈곤 계층 부의 성장을 통한 포용성 제고
- (안정과 포용) 지역경제 안정성의 제고는 지역의 경제적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해 가능

3. 지역경제 포용성 및 성과의 측정 및 결과

□ 소득불평등도 측정

- 소득지니계수를 활용해 시군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
- 시군구에서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2009년에 비해 2016년에 심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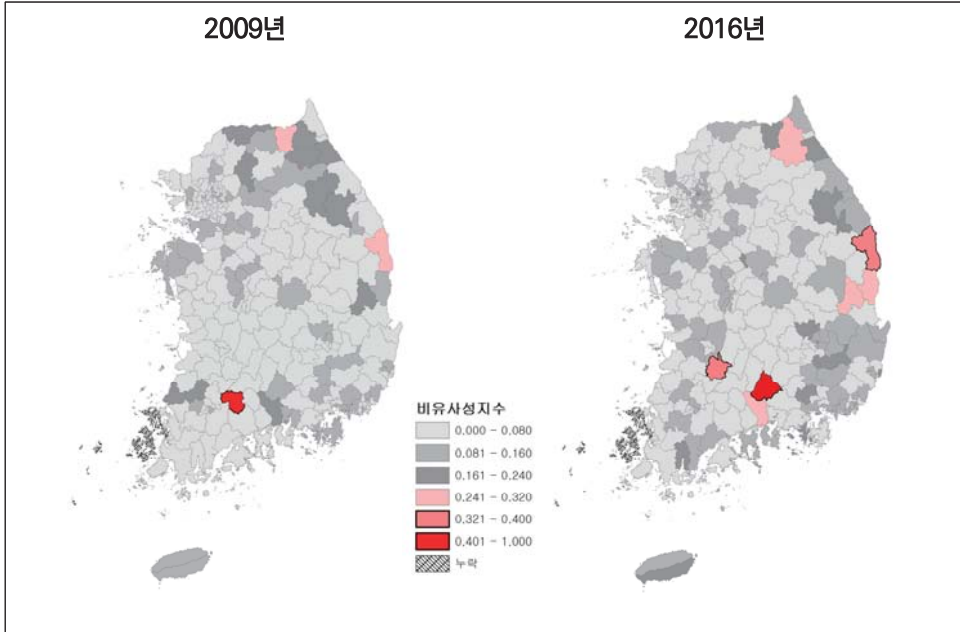
그림 2 | 소득지니계수 측정결과 (2009, 2016)



□ 공간분리지수 측정

- 비유사성지수 측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서 소득에 따른 공간분리정도를 측정
- 전북, 경북 내륙과 같은 인구과소 지역과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의 공간분리수준이 높게 관찰됨
- 2016년 시군구 단위에서 공간분리 수준은 비해 2009년에 심해짐

그림 3 | 공간분리지수 측정결과 (2009,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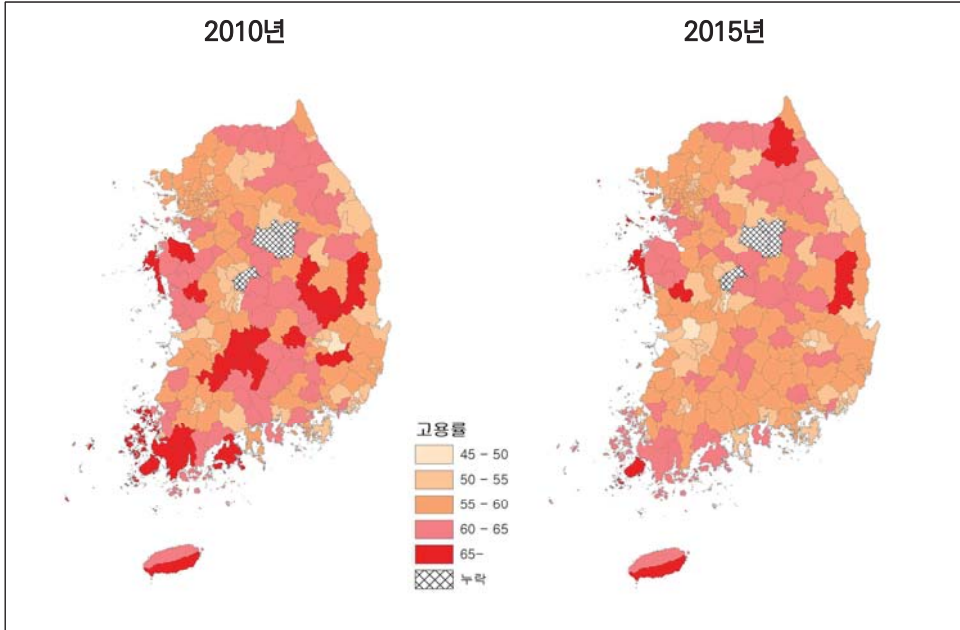


□ 경제적 참여(고용률 활용) 측정

- 15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취업자)를 활용하여 각 시군구별 고용률을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참여 정도를 측정¹⁾
- 비도시지역에서의 고용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됨
- 고령인구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와 도시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됨
- 2010에 비해 2015년 시군구 단위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관찰되며, 이는 전국가적인 거시경제적 상황의 부정적 여파가 고용측면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

1) 센서스 자료 구축 한계로 인해 타 지표와 다르게 2010과 2015년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

그림 4 | 경제적 참여 측정결과 (2010, 2015)



□ 지역경제 성과 측정

- 2009년 2016년 두 시점 사이 시군구 소득 성장률, 연평균 고용 성장률, 일자리 수의 불안정성 지수를 측정

표 2 | 지역경제 성과 측정 결과 (상하위 10개 시군구)

상위/하위	소득성장	연평균 고용 성장	일자리수 불안정성
상위 10개 시군구	부산 강서구	세종시	전남 나주시
	서울 용산구	부산 기장군	울산 동구
	강원 인제군	인천 연수구	경기 수원 영통구
	강원 화천군	충남 당진시	경남 산청군
	강원 양구군	경기 성남 분당구	경남 고성군
	충남 당진시	경기 화성시	경남 통영시
	경북 울진군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충남 아산시	경기 파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완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 송파구

상위/하위	소득성장	연평균 고용 성장	일자리수 불안정성
하위 10개 시군구	서울 서초구	충남 아산시	경기 과천시
	전남 곡성군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인천 강화군	경기 과천시	인천 서구
	전북 부안군	부산 동구	부산 사상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북구	경기 평택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
	경기 성남 수정구	부산 중구	전남 여수시
	서울 도봉구	경남 합천군	청주 서원구
	경기 과천시	부산 사하구	대전 유성구
	경북 예천군	강원 동해시	경기 일산 동구
	경남 밀양시	마산 회원구	대구 서구

4. 지역경제 포용성의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

□ 포용성 구성요소 연관관계 분석

-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공간분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공간 분리 역시 기회제한을 통해 고용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됨
-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관계는 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거나 소득증가 규모가 낮은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남
-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하거나 일자리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남

□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분석

- 탐색된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경로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 산업구조,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구조 변수들의 경우 소득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됨

- 정책 변수 들 중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3 |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탐색 결과

부문	구분	결정요인	활용지표
지역 요인	산업구조	산업구조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기업체 규모	업체당 고용인원
	인구구조	고령인구	65세이상 인구 비율
	고용구조	고용의 질	임시 및 일용직 비율
	기타 지역 특성	상위 권역별 특성	권역별 더미
정책 요인	주거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재고 비율
	지역개발 및 지원	세종시 및 혁신도시	관련 시군 더미
		성장촉진지역	관련 시군 더미

5. 정책적 활용 방안

□ 정책적 시사점

- “지역 간” 균형과 “지역 내”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

그림 4 | 지역 정책공간의 세분화



-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융합 추진 필요

→ 사회복지 정책 수요의 공간적 분포, 그리고 각 공간 및 지역 별로 상이한 지원 수단이나 지원 정도 등은 기존 광역단위 보다 더욱 미시적인 세부적 공간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 지역 포용성 제고정책수립을 위한 활용방안

(지역 포용 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에 활용)

- 단순한 지역단위 평균소득 비교를 넘어서는 다각화(소득분배,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된 지역 소득관련 지표로서의 활용
- 지역 소득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생활 최저기준(Regional Minimum)도입에 활용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활용)

-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 예)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 도 단위 지역 내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도입
- 지역 소득증대를 포용성 제고
 - 예) 지역 주민주도, 장소기반적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유흥자산의 공유화 및 사업 성과 공유를 통한 주민 소득의 실질적 개선 도모
-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
 - 예) 지역별 포괄케어 시스템 및 복합시설 건설 등의 포용거점 구축 및 지원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5. 연구의 기대효과	17

제2장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1. 포용성과 포용 성장	21
2. 포용성의 공간적 함의	27
3. 포용성과 지역경제 성과	31
4. 소결과 시사점	36

제3장 지역경제 포용성 및 성과의 측정

1. 지역경제 포용성 측정	41
2. 지역경제 성과 측정	59
3. 소결과 시사점	66

제4장 지역경제 포용성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

1.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의 연관관계 분석	69
2. 지역 포용성의 결정요인 분석	78
3. 소결과 시사점	85

제5장 정책적 활용 방안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89
2. 지역 포용성 제고 정책수립을 위한 활용방안	93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07
2. 한계와 향후과제	109

참고문헌	111
------------	-----

부록 1. 측정결과표	117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5
〈표 2-1〉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	22
〈표 2-2〉 주요 국제기구의 포용 성장 개념	25
〈표 3-1〉 포용성 측정에 활용된 통계자료 및 출처	41
〈표 3-2〉 소득지니계수 상하위 10개 시,군,구	43
〈표 3-3〉 공간분리지수 상하위 10개 시,군,구	50
〈표 3-4〉 고용률 상하위 10개 시,군,구	58
〈표 3-5〉 지역경제 성과 측정에 활용된 통계자료 및 출처	59
〈표 3-6〉 경제성장 측정결과 상하위 10개 시,군,구	60
〈표 3-7〉 일자리수 불안정성 상하위 10개 시,군,구	64
〈표 4-1〉 시군구 유형화 기준 및 지표	70
〈표 4-2〉 전체 시군구 연관관계 분석 결과	71
〈표 4-3〉 빈곤계층 비율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2
〈표 4-4〉 평균소득 증가율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2
〈표 4-5〉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3
〈표 4-6〉 일자리수 불안정성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3
〈표 4-7〉 광역시 외 시군구 연관관계 분석 결과	75
〈표 4-8〉 빈곤계층 비율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5
〈표 4-9〉 평균소득 증가율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6
〈표 4-10〉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6
〈표 4-11〉 일자리수 불안정성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77
〈표 4-12〉 광역시 내 시군구 연관관계 분석 결과	78
〈표 4-13〉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탐색 결과	79
〈표 4-14〉 지역 소득증가를 매개로 하는 경로분석 결과	80

〈표 4-15〉 지역 소득증가 경로분석 요약	82
〈표 4-16〉 지역 일자리수 성장과 불안정성을 매개로 하는 경로분석 결과	83
〈표 4-17〉 지역 일자리수 및 안정성 매개 경로분석 요약	84
〈표 5-1〉 2016년 시도별 일인당 소득 및 소득지니계수	90
〈표 5-2〉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내용	94
〈표 5-3〉 2009년, 2016년 시도별 일인당 소득증가율 및 표준편차, 표준편차 증가율	97
〈표 5-4〉 일본의 시민뱅크 제도	100
〈표 5-5〉 주민주도 지역 고유 자산 사업 사례	10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위험-추세 연결도에 나타난 포용성장의 중요성	4
〈그림 1-2〉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5
〈그림 1-3〉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소득격차, 공간분리, 경제적 활동 제한의 상호작용	28
〈그림 2-2〉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	32
〈그림 2-3〉 경제성장과 포용	34
〈그림 2-4〉 소득분배와 상대빈곤 추이	35
〈그림 3-1〉 시, 군, 구 지니계수 측정결과, 2009	44
〈그림 3-2〉 시, 군, 구 지니계수 측정결과, 2016	45
〈그림 3-3〉 시, 군, 구 비유사성지수(공간분리지수) 측정결과, 2009	48
〈그림 3-4〉 시, 군, 구 비유사성지수(공간분리지수) 측정결과, 2016	49
〈그림 3-5〉 울진군 내 읍, 면 간 평균소득 (2009, 2016)	51
〈그림 3-6〉 임실군 내 읍, 면 간 평균소득 (2009, 2016)	52
〈그림 3-7〉 부산 동구 내 동 간 평균소득 (2009, 2016)	53
〈그림 3-8〉 대구 중구 내 동 간 평균소득 (2009, 2016)	53
〈그림 3-9〉 서울 서초구 내 동 간 평균소득 (2009, 2016)	54
〈그림 3-10〉 시, 군, 구 고용률 측정결과, 2009	56
〈그림 3-11〉 시, 군, 구 고용률 측정결과, 2016	57
〈그림 3-12〉 시, 군, 구 평균소득 증가율	61
〈그림 3-13〉 시, 군, 구 연평균 일자리수 증가율	62
〈그림 3-14〉 시, 군, 구 일자리수 불안정성	65
〈그림 4-1〉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분석 경로	80
〈그림 5-1〉 지역 정책공간의 세분화	91
〈그림 5-2〉 공간정책과 사회정책 융합	92
〈그림 5-3〉 국가적 최저기준 선정 과정	96
〈그림 5-4〉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102
〈그림 5-5〉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도	103

1

CHAPTER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2. 연구의 목적 | 10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4
- 5. 연구의 기대효과 | 17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및 포용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포용성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추상적, 규범적, 정성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던 공간에서의 포용성을 “개인소득”이라는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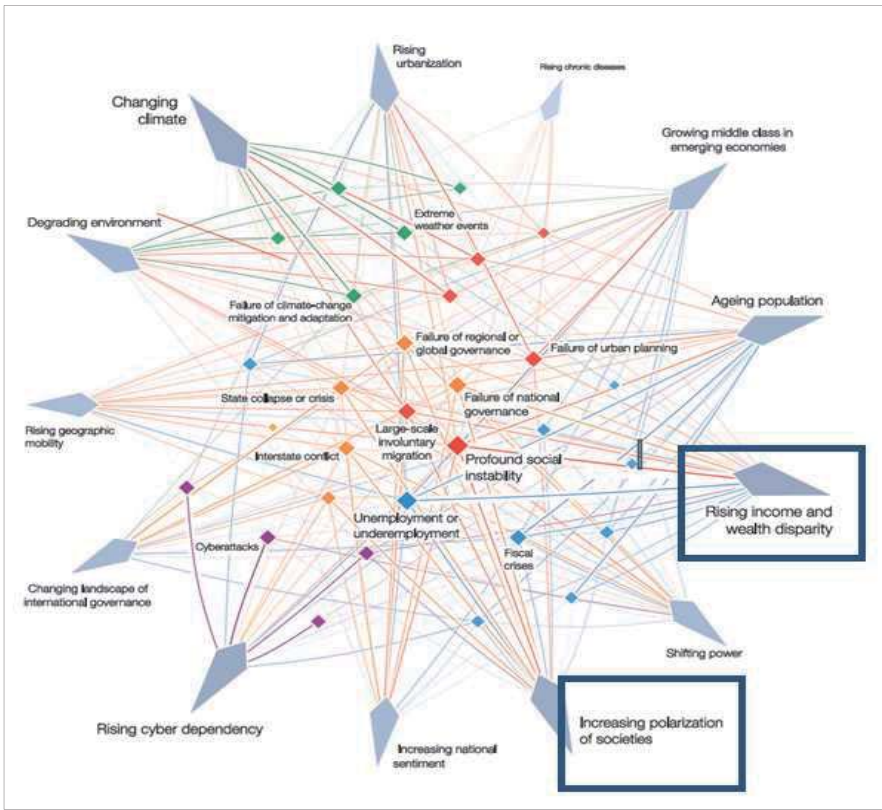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포용국가”를 공식적인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포용국가의 달성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용국가 혹은 포용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요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 최근의 일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포용성장”이 새로운 성장 모델이자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이 2017년 발행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서는 향후 10년간 전지구적 안보를 위협할 치명적인 요인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와 “사회 양극화 증대”를 선정²⁾하였다(그림 1-1).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제기구와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포용성장 혹은 포용성 확대를 미래 국가 및 사회 변영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문 경제인들의 단체인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연례회의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화두로 “포용성장”을 채택하였다(WEF, 2017).

그림 1-1 | 위험-추세 연결도에 나타난 포용성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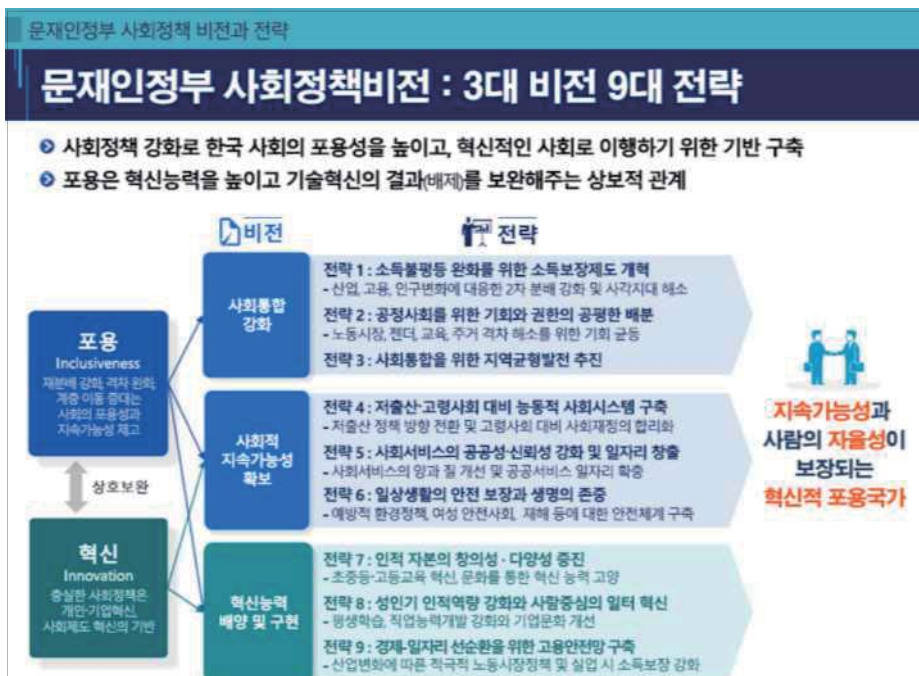


자료: The Global Risk Report WEF(2017), p. 3

2) 대륙, 전문분야, 연령, 성별, 소속기관 등 고려하여 전 세계에서 총 745명의 전문가 참여자를 선정 설문조사 실시

포용성장에 대한 이러한 폭발적 관심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정책의 아젠다로서 포용에 대한 개념과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다양한 파생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국가적 관점과 시스템에서 “포용”을 규범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는, 지역 혹은 공간 단위의 문제로 “포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포용의 문제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배제 등이 모두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집단 간의 불평등이 공간적 분리와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림 1-2 |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18. 9)

물론, 포용도시, 포용국토와 같이 포용과 공간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림 1-2>와 같이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역시 “사회통합강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간전략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용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과 정책들은 여전히 규범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포용성”의 제고 혹은 “포용성장”을 단순히 규범적 가치로 인식하고 철학적인 논의나 실증적인 기반없이 포용성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나열식의 접근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단위의 소득 분배 문제 및 이와 관련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 안정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공간적 포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그간 자료 구득의 한계 등을 이유로 그 측정과 분석이 불가능했던 지역 단위에서의 소득, 소득분배 및 불평등, 이들의 공간에의 분포 등을 개인단위의 마이크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물론 “포용” 혹은 “포용 성장”이 지니고 있는 최소생활수준이나 적극적인 생활SOC 공급과 같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를 차치하고 지역의 경제적, 특히 소득 측면에서 분배 및 이와 관련한 지역경제의 성장, 안정 요인으로 그 실증분석의 범위를 좁혀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논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다소 규범적인 측면에서 관념적인 논의 위주로 언급되어온 “포용성”의 개념을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진단 및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니는 핵심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1)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 수단의 다양성을 차치하면, 기존 우리나라 성장 방식은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집단 위주의 성장 지향적인 형태로 추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포용성장 등장의 배경이 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역시 특정 집단에 대한 소득집중, 이에 기인한 분배의 불균형이 가져온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성장 및 발전 방식의 한계는 비공간적인 소득불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른바 성장거점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중심의 개발과 이로 인한 경제적 수혜가 인근 지역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여전한 경제적 기능 집중 현상이,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 거점 도시로의 집중과 인근 지역의 공동화, 지방 소멸이, 더 낮은 차원의 공간 단위에서는 특정 읍, 면, 동으로의 인구 집중 등이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 불균등을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불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 혹은 거주지 분화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Massey and Denton, 1993). 국내의 경우 지역이나 개인 단위의 구득가능 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이 제한적이긴 하나, 소득 자료의 대표적인 대리 변수인 교육수준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최고와 최저학력 가구 간 거주지 분리 정도가 심해진 것이 확인된 경우가 있다 (김동현 외, 2010).

즉, 지역 단위에서 개인 소득자료 구득이 가능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 포용성 및 포용 성장 측면에서 지역 단위의 소득수준, 소득불평등, 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성장”이라는 기존 지역경제 성과의 대표적인 패러다임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지역경제 성과 혹은 성장의 특성이 지역의 발전과 그 수혜의 분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건 변화

기존 지역 성장 및 발전 방식에 대한 한계, 반성과 더불어 최근의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건 변화 역시 지역 포용성에 관한 실증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도성장의 종말, 저성장의 고착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들의 공간에의 적용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조망하고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할 첨단기술의 도입은 정책적 개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그 속도와 격차를 우려해야할 정도로 급격하게 전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스마트한 공간 환경 속에서는 이른바 초연결이라고 하는 정보와 기술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사람, 집단, 특정 지역의 쇠퇴와 격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춘성(2017)은 “4차 산업혁명 본질은 ‘초연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뉴노멀(New Normal)은 낫노멀(Not Normal)이다. 대가와 축적이 쏠리는 현상이자, 곱셈과 제곱의 논리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다.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저버리지 못한 평균의 시각으로 볼 때나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연결을 핵심역량으로 갖고 있는 특정 일부에게는 초고성장 시대이다. 한편, 평균을 종잡기 어려운 뉴노멀 시대에는 당연히 확실한 게 드물어진 다. 그러니 불확실성 시대라 할 수밖에 ...”(임춘성, 2017)

즉,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의 경우 이른바 기본적인 경제적 참여나 기회에서 조차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공간적 분리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화된 여건 속에서는 이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적 불평등이 정보, 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접근성을 매개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간적 분리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

인 분석, 특히 지역 내 저소득층의 공간적 분리 현상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필요성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 포용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필요

앞선 연구의 필요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소득분배를 기반한 지역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나 분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용성에 대한 공간 측면에서의 논의들(포용도시, 포용국토)은 다소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정책 대안들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도출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규범으로서 “포용성”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의도는 없으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역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포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 전략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서밖에 머무를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용성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분배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역이나 개인 단위에서의 미시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구득 가능한 자료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비록, 포용성 및 포용 성장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소득” 및 이와 관련 있는 지역 경제적 측면으로 그 논의의 영역을 다소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서 소득분배 및 공간적 분리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기존의 추상적인 논의를 뛰어넘는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각 지역의 여건, 특성, 유형에 맞는 포용성 제고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실효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공간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어온 소득격차를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포용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지역 단위에서의 소득불평등과 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로 인식하여 측정, 진단한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 소득 측면에서 포용성의 결정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포용성 제고 혹은 포용적인 지역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규범적인 개념이나 다양한 지표 구축 측면에서 분석되어온 지역의 포용성을 소득분배, 공간적 분리, 기회(참여)제한 측면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포용성은 크게 소득 불균등과 이로 인한 공간적 분리, 더 나아가 공간적 분리로부터 발생 가능한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회(참여)의 제한 혹은 불평등으로 구조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 및 분석의 기초가 되는 소득분배의 경우, 지역 차원의 가용한 통계자료의 부재 및 구득제한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해당 실증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구득이 가능해진 개인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와 이를 구성하는 읍·면·동과 같은 미시적 공간단위에서의 소득분배, 공간분리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포용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지역 경제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여건으로 인식하여 어떠한 특성을 지닌 지역경제 성과가 포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급격한 경제 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로 인한 공간분리와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측정가능한 한 지표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의 과정 및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포용성 진단 및 포용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미시적인 공간단위에서 개인 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소득분배 구조 등의 정량적인 측정은 그 측정결과 자체만으로도 지역정책 수립

의 정량적 근거자료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간적인 특성을 배제한 채 분절적으로 수립, 집행 되어온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공간적 특성이 감안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른바 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를 위한 토대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기존에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국토”라는 공간적 범역을 대상으로 한 “포용국토” 관련 연구나 도시권 차원에서 도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는 “포용도시” 관점의 연구가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과 동시에 지역의 포용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³⁾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기본적인 실증분석의 단위로 활용하였다. 특히, 소득분배 및 공간적 분리에 관한 측정은 개인수준의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읍·면·동을 분석 단위로 수행하였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소득 관련 마이크로 빅데이터의 시계열자료 구축 가능 시점 및 여타 자료 구축 주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확보한 빅데이터의 시계열 -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 - 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공간분리와 관련 지표들의 약 7년여

3)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여타, 지역경제 성과 - 성장 및 안정 - 역시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정도와 특성을 측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 연구 고찰

지역경제 성장, 안정, 형평 등과 관련한 이론 및 기존 실증연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포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및 성장, 안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 정책의 규범으로써 “지역 포용성 제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 필요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 제고를 시도하였다.

(2) 미시적 통계 자료 분석

읍·면·동수준의 공간에서 개인 단위의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분석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세부 지역단위에서의 소득 불평등, 소득에 따른 공간 분리 현상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 관찰하여 지역 포용성 관련 실증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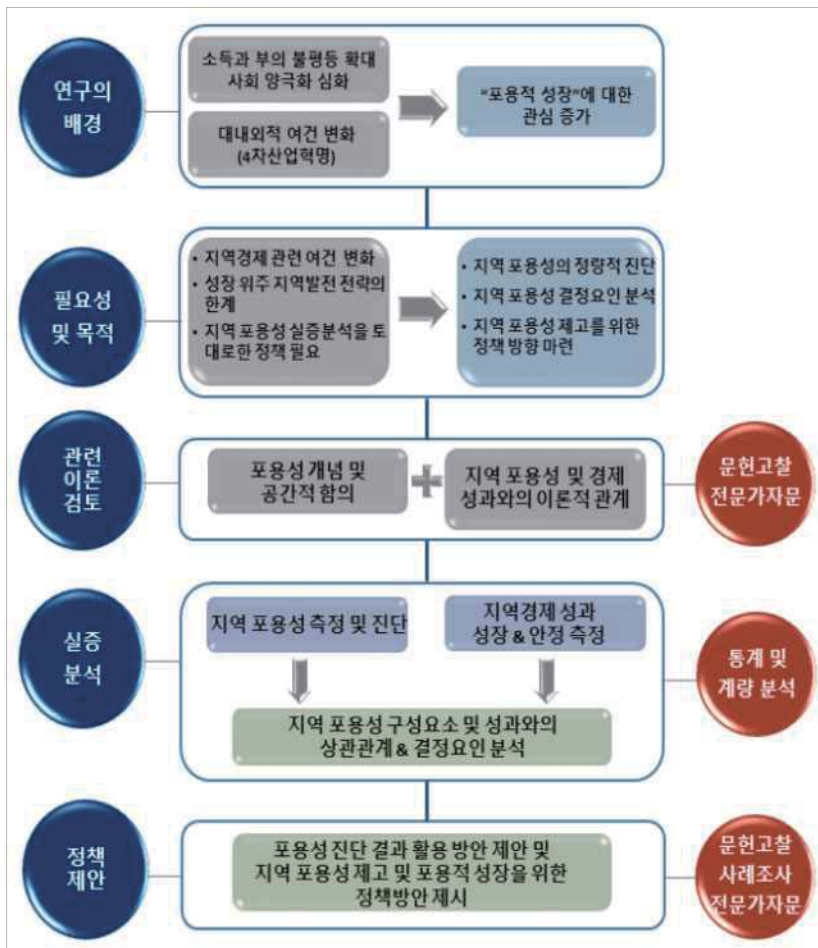
(3) 계량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지역의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역경제 성과 - 성장 및 안정 - 를 지목하고 이들과 지역 포용성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된 각각의 개념과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 포용성 및 지역 경제 성과와 관련한 변인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포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4) 전문가 자문회의

원내 연구자, 국책 연구기관 또는 시도 연구기관 및 학계의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포용성 제고의 규범화와 관련된 타당성, 포용성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방법론 고도화, 포용 성장 등의 달성을 위한 정책 제언 등과 관련한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1-3 |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지역경제의 성과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적성장”이라는 다소 편향된 지역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치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촉발한 지역경제 성장 및 회복에 대한 반응차원에서 수행된 홍사흠(2015)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융합적인 경제성과를 타진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분석의 단위가 지나치게 넓고 관련 요인 역시 산업구조의 특성으로만 국한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소득분배나 공간적 분리 현상과 같은 포용성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정호 외(2016)는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국토정책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국토의 포용성 제고라는 규범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단위에서 포용성을 진단·측정하는 차원의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박인권(2015)는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국토정책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포용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의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도시 및 지역의 규범으로서의 포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지역 및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혹은 정량적으로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모색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다. 일부 지표 연구들 역시 국내의 포용력 관련 지표들을 정리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차

원에서 지역 포용성 및 이와 연관된 개념의 논의만 추구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포용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공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공간마다 상이한 특성을 배제한 단순한 포용성 개념의 적용이나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의 활용은 그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 연구자: 홍사흠 (2015) - 연구목적: 다차원적인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 분석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지역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관련한 이론 정리 - 산업구조 측정지표 및 장단점 논의 - 안정적성장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특성 분석
	2	- 과제명: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 연구자: 문정호 외 (2016) - 연구목적: “포용적 국토”의 규범정립 및 대안적 정책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 제시	- 전문가 심층의견 수렴(포커스 그룹 인터뷰) - 통계 및 지표 분석 - AHP 설문 등	- 포용개념 규범성 및 철학적 의의 검토 - 우리나라 및 해외의 공간적 포용정책 검토 - 포용적 국토 정책개념 및 핵심 정책과제 제시
	3	- 과제명: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 연구자: 박인권 (2015) - 연구목적: 규범적 도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 개념 정립 및 관련한 우리나라 도시 정책 평가 및 재해석	- 문헌 연구 - 사례 조사 - 관련 정책 검토 등	- 포용도시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제시 - 문헌 고찰을 통한 포용도시의 맥락, 정의, 공간적 차원 검토 - 우리나라의 공간적 포용 정책 검토 및 장단점 논의
본 연구		- 과제명: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연구목적: 성장, 안정, 형평의 측면에서 지역 포용성을 분석하고, 포용 성장(융합적인 성과) 달성의 가능성 타진 및 관련한 정책 방안 제안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지역 성장, 안정, 형평 관련 이론 연구 -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형평(소득분배)의 정량적 측정 및 상호관계 분석 - 포용성 진단 결과의 정책활용 방안 및 포용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의 대상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공간을 대상으로 포용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포용국토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념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수행되거나, 포용도시와 같이 도시별 세부적 특성을 간과한 일반적인 도시화된 공간에서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시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간의 포용성, 즉 소득분배 및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한 연구는 자료 구득 가능성

여부를 떠나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추상적, 규범적, 일반적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통해 배출된 연구의 결과들 역시 한계를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는 지역이나 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 제언의 근거로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구나 연구 기관에 선언적으로 제시한 포용성 제고 및 포용 성장과 관련된 정책 수단들을 정성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소개, 응용하는 형태로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물론, 포용성과 관계된 국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연구 성과 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형성 과정에의 기여를 고려하면 아직은 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록 제한적인 자료와 지표를 활용하긴 하지만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의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가장 대표적인 차별점으로 내세워 수행되었다. 우선 “소득”이라는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 연구에서 그 구득 가능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왔던 부분을 마이크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지역 형평 및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순히 소득분배 및 기회균등에 대한 측정 및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지역경제 성과 지표(성장, 안정)들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포용성제고 및 포용 성장에 대한 실증적 달성 가능성, 관련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지역의 포용성과 관계된 다양한 개념들을 모두 정량화하거나 실증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지역 소득분배 불평등 및 공간적 분리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만으로도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5. 연구의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그간 국가 혹은 도시 단위의 정책적 담론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왔던 “포용성”이라는 개념과 주제를 지역단위로 확장하였다. 기존의 포용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그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국가나 혹은 광범위한 권역단위의 연구에 국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소득 통계가 매우 제한적인 여건에서 읍, 면, 동 수준의 공간적 정보를 지닌 개인 소득통계를 활용하여 지역 및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예측들을 실증적으로 실험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대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경제적 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는 국가전체 수준에서의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서만 분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지역 단위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 내의 소득분배나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와 동시에 이러한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가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거주지 분리와 같은 공간적 분리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배제와 같은 비공간적 논의 위주로 접근되어 온 포용에 대한 개념을 빈곤의 공간적 집중, 소득에 따른 공간 분리, 공간에 따른 고용 기회 제한 등과 같은 공간적 현상과 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공간적 분리와 사회·경제적 분리 사이의 상호관계가 존재하며, 때로는 공간적 분리와 배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계층 간 소득이나 취업기회 등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이는 포용성 및 포용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의 공간적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격차와 거주지 분리와 같은 도시 내 공간구조를 연구했던 기존 접근들 역시 지역 소득 통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교육수준과 같은 대리변수를 활용하는 등의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공간 정보를 지닌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선별 및 그 집중 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소득불평등이나 지역경제의 성장, 안정 등과 연계한 분석을 통해 포용성 제고나 포용적 성장과 관련한 지역의 경제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포용 성장이라는 국가 단위 정책의 화두를 지역이라는 하위공간의 정책으로 이슈화하였다. OECD,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 정책기조로서의 포용 성장의 논의 모두 아직은 국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용성장 혹은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지역단위에 적용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에서 포용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정책적 담론 형성을 정량적 근거를 통해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포용국가 만들기”**를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 자료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실증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미시적인 공간단위를 기반했다는 특성으로 인해 공간이나 지역에 대한 정책 단위의 접근을 세분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시, 도 혹은 시, 군, 구 라는 광역 단위의 격차를 뛰어넘어 읍, 면, 동 수준에서의 소득 측정 및 공간적 분리 현상을 분석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포용적 정책이 필요한 공간 단위를 선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지원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 집중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공간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수립을 근거로 본 연구의 측정 및 분석 결과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2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 1. 포용성과 포용 성장 | 21
- 2. 포용의 공간적 함의 | 27
- 3. 포용성과 지역경제 성과 | 31
- 4. 소결과 시사점 | 36

지역 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본 장에서는 포용성과 포용성장에 관한 일반적이고 다양한 개념들과 이들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였다. 또한 일견 비공간적인 이슈로 인식되기 쉬운 포용의 공간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소득분배와 관련된 포용성이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러한 포용성의 공간적 작용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경제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도 제시하였다.

1. 포용성과 포용 성장

1) 포용성 개념

(1) 포용성 개념의 배경

포용성은 특정한 경계, 즉 사람들을 사회에 속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포용을 방해하는 조건(장벽 또는 과정)인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어 활용되었다(UN/DESA, 2009; 조권중, 2017).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10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벗어나 있는 취약계층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1970년 대 처음 사용되었다(UN/DESA, 2016; World Bank, 2013).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배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혜택이 매우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특정집단에는 그 성과가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Kabeer, 2006; 박인권, 2015).

공통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불평등(자원과 기회에 대한 빈곤과 결핍, 박탈, 차별)의 고착화로 인한 구성원들 간 사회적 결속 균열과 사회 통합 붕괴와 관련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한 우려 및 이러한 구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및 수정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UN/DESA, 2016; WHO, 2008).

(2) 포용성과 사회적 배제

포용성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의 개념이 출발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연계하여 고찰해야 한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같이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정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동태적 과정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인권, 2015; 조권중, 2017; 최병두, 2017). 즉, 연령,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문화, 언어 등과 같은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과정, 그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초래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UN/DESA, 2009; 2016). <표 2-1>과 같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이러한 정의들은 Graham Room (1992, 1995)에서 출발하는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Mathieson et al., 2008).

표 2-1 |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

연구자	정의
Madanipour et al. (1998)	- 사회적 배제는 광범위한 변화와 국가적 상황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정 집단이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Byrne(1999)	- 사회적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고용과 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 문화적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배제가 결합된 다차원적 과정
Burchardt et al. (1999)	- 개인이 한 사회에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사회의 시민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Juliano (2001)	- 사회적 배제는 소외과정의 극단에서 발견되는데 이 소외의 결과는 경제적 자원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낮춤. 또한 특정 집단의 평가 절하와 낙인찍기, 차별적 관습은 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음

연구자	정의
Valencia (2001)	- 격리와 소외뿐 아니라, 다른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유형
Pierson (2002)	- 사회적 배제는 사회 및 경제, 정치적 활동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개인과 가계, 집단에게 박탈하는 과정 - 주로 빈곤과 저소득의 결과이지만, 차별이나 낮은 학업성취 등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침 -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의 대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네트워크, 성장기회로부터 단절됨
Estivill (2003)	- 권력, 자원의 중심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인력, 집단, 커뮤니티 및 지역을 열등한 위치에 두는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파열로 인한 과정의 축적
Barnes (2005)	- 사회적 통합을 결정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체계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되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과정
Landman (2006)	- 하나 또는 다중의 사회적 속성에 기초한 개인 및 집단의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차별은 국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활동과 민간 부문(가족, 마을 및 지역 사회단체 등)의 활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음
Levitas et al. (2007)	- 사회적 배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원 및 권한, 재화·서비스의 부족과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을 의미함.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형평성과 응집력 모두에 영향을 미침

자료: Mathieson et al., 2008, 〈부록 1〉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성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 뿐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여 이러한 배제를 완화·극복하는 과정이자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UN/DESA, 2009; 2016; UNESCO, 2005; 박인권, 2015; 조권중, 2017; 최병두, 2017).

2) 포용 성장

(1) 포용 성장의 배경

과거 빈곤의 감소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것임에도 현재 포용 성장이 대두된 이유는 불평등, 실업과 같은 문제를 차치한 채 경제성장만을 우선 한 정책기조가 빈곤층의 성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Alexander, 2015). 즉, 포용 성장은 ‘빠른 성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속도와 패턴 모두 중요함’을

의미(Alexander, 2015)한다. UNDP(2017)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국가별 가구 소득 불평등도가 고소득 국가의 경우 9%, 저소득 및 중소소득 국가의 경우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다른 시기에 비해 오늘날 가장 불평등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개발도상국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적 진보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것을 반증한다(UNDP, 2017).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전반적인 불평등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명확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불평등이 빈곤층의 소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Ostry et al, 2014; 김정훈 외, 2017; Alexander, 2015; Weide and Milanovic, 2014). 특히, 1990년대에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통하여 낙수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공유된 성장(Shared growth)¹⁾, 다기반성장(Broad-based growth)²⁾, 빈곤감소성장(Pro-poor growth)³⁾ 등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윤성주, 2014; Alexander, 2015).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최근의 저성장 시대에서 ‘격차’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포용 성장의 개념과 저성장 시대에서의 그 중요성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윤성주, 2014; 장용석 외, 2016)하였다.

1) 포용 성장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공유된 성장(Shared growth)이라는 용어는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잘못 이해될 수 있으므로 World Bank(2009)은 포용 성장이라는 용어를 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함

2) World Bank(1990)에서 다기반 성장(Broad-based growth)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이는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문의 성장을 의미함. World Bank가 포용 성장을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국가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포용하는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용어가 유사점이 있음

3)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소득 빈곤이 떨어질 때의 경제성장이 빈곤감소(Pro-poor)라는 절대적 정의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이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보다 많을 경우에만 빈곤감소로 간주하는 상대적인 정의로 구분. 상대적 정의가 불평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경우, 절대적인 정의가 더 적합할 수 있음. 상대적 정의에서 불평등의 변화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이익을 받지 못하면서 빈곤층이 될 수 있는 반면, 불평등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 성장은 여전히 빈곤층의 절대적인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2) 포용 성장의 정의

포용 성장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원론적으로는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이익의 개인적·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노동에 대한 기회를 높여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정훈 외, 2017). 포용 성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World Bank는 형평성, 기회의 평등, 시장 및 고용 전환의 보호를 포함하는 포용성이 성공적인 성장 전략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다(Commission on Growth, 2008; World Bank, 2009에서 재인용). 포용 성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킨 IMF(Ostry et al, 2011;2014)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성장과 불평등 간에 역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포용성 확대(불평등 완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김정훈 외, 2017).

표 2-2 | 주요 국제기구의 포용 성장 개념

국제기구	포용성 및 포용 성장 개념
World Bank (2009)	- 포용이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또 다른 성장의 방식을 의미함 - 기존의 공유성장개념은 소득분배만을 강조. 반면에 포용 성장이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와 균등한 배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ADB(2011)	- 포용이란 공간적 포용을 의미 - 도심 내 슬럼가의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거주민의 접근성 향상
OECD(2014)	- 포용이란 그동안 도외시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성장의 방식 -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육과 의료 같은 소득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역들을 고려하는 성장방식

자료: 문정호 외 (2016, p. 19) 재인용

OECD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고에서 포용 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성장에 대한 배분이 개인과 사회집단에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복지는 건강과 교육, 사회적 관계, 제도와 같은 비소득적 차원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부의 증가는 복지의 한 축일 뿐이라는 인식이다(OECD, 2014). 여전히, 소득분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

작한 접근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ADB의 포용 성장은 광범위한 성장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특히 저소득층)이 창출된 기회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을 의미한다(Ali and Hwa Son, 2007; OECD, 2014). 즉, 접근성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개념으로 포용성 및 포용 성장의 인식을 확대하였다. 정책적으로는 ADB의 Strategy 2020은 교육, 보건 및 기본적인 사회 보장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적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DB, 2017).

(3) 포용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포용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공감대는 불평등 확산이 다양한 개발 단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 소득 상위 10% 인구의 평균소득이 소득 하위 10%의 9배에 달하며 이는 25년 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곧 성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WEF, 2015).

포용성 및 포용 성장에서 주요 개념이 되는 경제성장과 불평등, 재분배의 관계에 대하여 Ostry et al. (2014)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불평등과 관련하여서는 불평등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투자 및 교육을 위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능력을 박탈하기 때문에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 경제성장과 재분배와 관련하여서는 재분배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정되나 일부는 재분배가 성장에 본질적으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부유한 계층에 이익이 되는 세금체계의 문제점 수정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재분배 정책이 보건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빈곤층의 복지를 향상시킬 때 재분배 정책은 평등과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enabou, 2000; Saint-Paul and Verdier, 1993;1997).

불평등과 재분배와 관련 Meltzer and Richard(1981)는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재분

배에 대한 압력이 조성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민주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경제적 권력보다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유권자 대다수가 재분배에 투표할 것이라는 견해). 즉, 포용성 및 포용 성장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은 소득의 분배, 부의 불평등이라는 점은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개입의 강도, 수단, 그 인식의 시발점은 연구자 혹은 국제기구별로 상이하다. 동시에 공간적 차원에서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 역시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2. 포용성의 공간적 함의

1) 포용성과 공간

포용 혹은 그것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지닌 배제라는 개념 모두는 태생적으로 영역적인 즉, 공간적인 특성을 지닌다(최병두, 2017). 포용(배제)은 사회공간적 계층, 집단, 공동체의 일정한 영역 혹은 공간적 범위에 포함(배척)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견 비공간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라는 현상 역시 공간적인 배제 혹은 분리라는 현상과 연계되어 더욱더 심각하게 포용성 저하를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포용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며, 공간적 포용 혹은 배제라는 현상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비공간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쉬운 지역 내 사회경제적 차별이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격차에 기인하여 빈곤층이 지역 내 특정한 공간에 집중되거나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지역 내 공간적 분리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현상의 고착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집중된 공간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정보나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기회 불균등의 심화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Massey and Denton, 1993).

그림 2-1 | 소득격차, 공간분리, 경제적 활동 제한의 상호작용



물론 국가에 따라 그 정도나 내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역 내 특정 거점이나 중심으로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 이러한 저소득층의 공간분리와 배제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정도가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정도와 문제의 폐해가 더욱더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단순한 비공간적인 사회문제가 아닌 공간적인 측면의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다른 성장론과 차별화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기회의 균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략) ... 부모의 교육·경제수준, 지역과 같이 이미 주어진 개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그들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의 분배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윤성주, 2014)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격차는 공간적 분리와 연계되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나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포용성 저하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공간적 분리와 배제는 지역

포용성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포용의 공간적 함의는 사회·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의 분리 및 배제에 대한 분석이 지역 포용성 진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2) 포용국토와 포용도시

이러한 포용에 대한 공간적 함의는 포용국토와 포용도시라는 공간과 포용을 연합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 아젠다 혹은 연구의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정호 외(2016)의 포용 국토는 기존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국토라는 공간을 계획하는 상위의 규범으로 “포용적 국토”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기존의 국토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포용국토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포용국토는 “공간의 물리적 개발을 통한 성장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쾌적·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회적 계층·지역 간의 격차·배제·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기회의 균등, 잠재능력 증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권리 추구하고 자발적 참여를 실천하는 삶의 터전”(문정호 외, 2016. p. 40)이라 정의하였고,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목표 1: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의 구현

- 과제 1: 합리적이고 지역적정성 있는 최소 공공서비스 기준 마련
- 과제 2: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시설·서비스 강화
- 과제 3: 도시 노후지역의 포용적 주거환경정비

목표 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 과제 1: 정책, 계획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 과제 2: 공공계획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도화

목표 3: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및 제도 환경 개선

- 과제 1: 공간서비스 간 연계와 커뮤니티 재구축

과제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강화와 계획보장청구권의 도입
(문정호 외, 2016. p. iii)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UN Habitat가 2000년부터 시작한 도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도시의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도시의 빈곤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배제를 근절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바람직한 도시 거버넌스의 규범을 지원하고 포용적 의사결정 과정을 도모하고자 한다(UN Habitat, 2000). 이때 포용도시는 이 캠페인의 최종 목표이자 이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종교 등 관계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회 및 자원들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의한다(즉 형평성을 가지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도시). 이에 주로 도시의 거버넌스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된다(박인권, 2015; 2016; UN Habitat, 2000; 2004; Davas and Wolff, 2016). ADB(2011)는 포용적 도시가 모든 도시 거주자 및 여러 도시 사용자들이 그들의 인적 자원을 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시 서비스, 사회 서비스 및 생계의 기회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포용도시 관점에서 공간적 분리를 명시적 언급한 World Bank(2015)는 도시의 포용성 저하, 즉 도시의 배제 현상을 공간적 분리, 사회적 배제, 경제적 배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공간적 배제, 공간적 분리는 저소득 가구가 공간적으로 외진 지역에서 함께 밀집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토지이용 규정, 토지 개발을 위한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토지전환에 대한 부패적인 관행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한데 원인이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 연령, 국

가, 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는 도시지역 내에서 접근성과 권리 및 기회를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 일부국가에서의 이민자와 도시에 정착한 피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등). 경제적 배제는 공간과 기술의 불일치뿐 아니라 기회 부족의 결과로, 소외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식주소나 신원 정보가 없으면 사람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교육 부족 및 건강상의 결함은 역시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더하여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 역시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될 수 있다. 유사하게 저소득층은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금융 기회에서도 배제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점점 취약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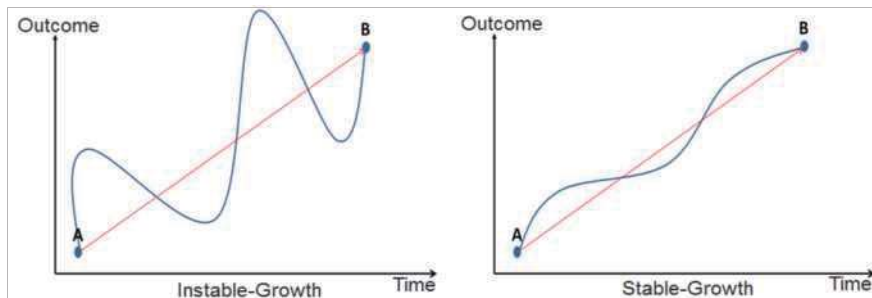
3. 포용성과 지역경제 성과

본 연구에서 “소득 분배”를 중심으로 분석될 지역의 포용성은 성장이라는 과실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나누어지는 과정이 “소득 분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성장과 안정과 같은 지역의 경제적 성과(Regional Economic Performance)라는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용 성장”이라는 의제에 직접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의 포용성은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지역경제 성과의 틀 속에서 진단되어야 한다. 즉,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나 특성을 지닌 지역 성과 혹은 지역경제의 발전 과정이 결국 포용성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장은 바로 이러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 개념간의 이론적 관계를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다.

1) 성장과 안정

과거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시절, 지역경제의 성과는 그것이 양적이던 질적이던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과실의 확대, 팽창으로 이해가능 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지역경제를 향한 대내외적인 부정적 충격을 경험하며, 안정성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성과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아래 <그림2-2>과 같이 두 지역이 동일한 성장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 안정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한 지역이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경우 해당 지역은 단기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두 지역이 동일하게 A에서 B로 성장했다고 할 경우, 좌측 지역은 우측 지역에 비해 더 큰 변동폭(fluctuation)을 보이며 불안정하게 성장한 반면 우측 지역은 좌측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 불안정성에 기인한 불확실성, 불안과 같은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를 감안할 때, 동일한 성장 규모 하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규범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산업구조(다양한 특화산업의 존재), 노동력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림 2-2 |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



자료: 홍사흠(2015), p. 4

즉, 본 연구에서 지역의 포용성과 지역경제 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한 지역경제 성장의 양이나 속도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이 성장에 왔는가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포용과 성장

본 연구와 유사하게 소득분배 관점에서 포용성을 분석한 Anand et al. (2013)은 소득 혹은 경제적 수혜의 분배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성장, 즉 규모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빈곤 계층 부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3>. 즉, 분배적 상황이 최소한 현상 유지 혹은 개선되는 조건에서 “성장”은 포용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회균등 측면에서도, 극단적인 고용 없는 성장의 상황이 아닌 이상,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수 증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및 기회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는 경우 빈곤층의 발전, 성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도 존재하며 이는 빠른 성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속도와 패턴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Alexande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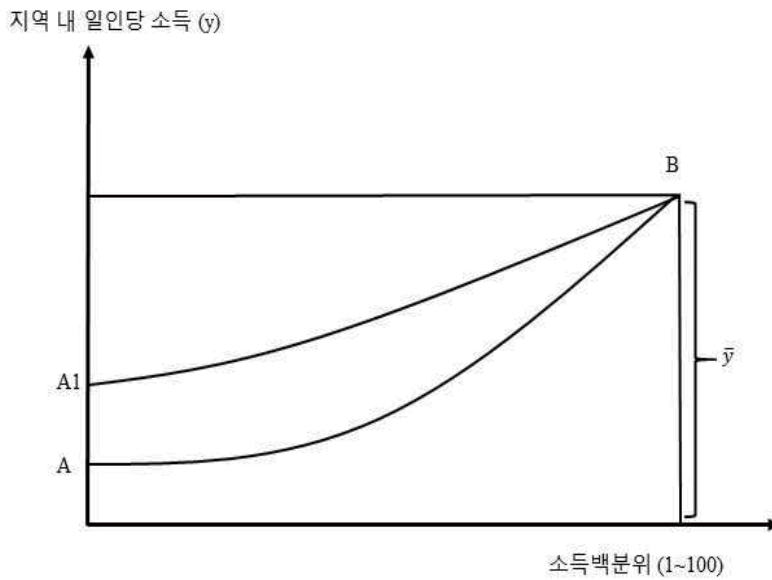
특히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개발도상국에서 소득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적 진보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UNDP, 2017). 또한 이러한 높은 불평등은 또한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을 낮추는 경향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반면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고소득층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Davas and Wolff, 2016).

그림 2-3 | 경제성장과 포용

- IMF(2013)에 따르면, 포용 성장은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의 평균적인 소득과 소득의 균등정도의 함수인 사회이동곡선(Social Mobility Curve)의 형태로 측정

• 사회이동곡선: $S^c \approx \left(y_1, \frac{y_1 + y_2}{2}, \dots, \frac{y_1 + \dots + y_{100}}{100} \right)$

y_1 : 가장 빈곤한 사람 ; y_{100} : 가장 부유한 사람 (소득 백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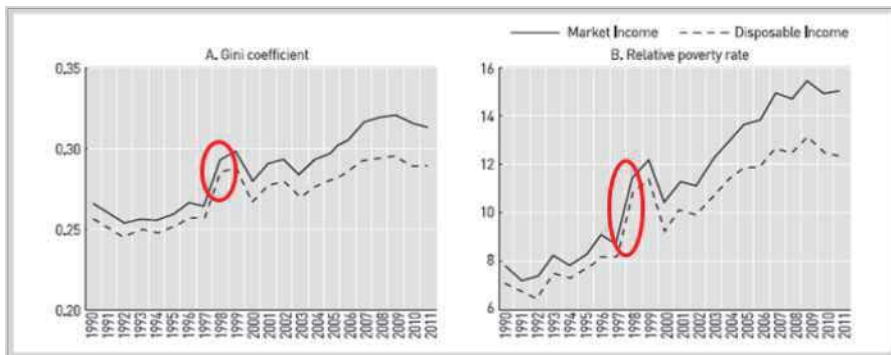
- 곡선위의 모든 점이 위로 이동하는 경우 포용적인 성장이 달성
 - 분배구조가 동일하거나 개선되는 경우,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포용 성장
 - 평균소득이 동일하거나 개선되는 경우, 분배구조가 개선되면 포용 성장
 -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분배구조 개선되고 평균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비교하여 포용 성장 여부를 판단

자료: Anand et al.(2013), pp. 5-8.

3) 포용과 안정

경제적 안정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단위의 포용 성장 결정요인 분석에서 인적자본과 산업구조적응력 등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포용 성장 결정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IMF, 2013). 김미곤(2014)에 따르면 아래 <그림2-4>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및 상대적 빈곤 수준은 IMF 위기를 겪으며 악화됐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림 2-4 | 소득분배와 상대빈곤 추이



자료: 김미곤(2014) 재인용, p. 12

이론적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충격은 사회·경제적으로 강건(robust)한 집단과 취약(vulnerable)한 계층에 미치는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경제적 충격이 소득분배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결과와 해석⁴⁾으로 나타나지만, 대다수의 경우 경제적 공황의 충격은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Jenkins et al., 2012). 구체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기업규모에 따라 미치는 영향

4) 소득의 원천 및 충격에 대한 반응 기간에 따른 다양한 결과 해석이 주를 이룸

을 연구한 Gasper and Massa(2006)를 통해 경제적 충격이 서로 다른 소득계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Gasper and Massa(2006)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고 반대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충격을 받는 과정을 두 가지의 효과(effects) - Natural Hedge Effect (충격 전가효과로 번역)와 Uncertainty Effect (불확실성 대비 효과로 번역) - 로 설명한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지역 포용과 안정의 관계에 적용 하면, 먼저, Natural Hedge Effect (충격전가효과)는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고소득계층은 그 충격에 발생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기업주의 정리해고(노동비용절감), 임대료 상승). 또한, 2) Uncertainty Effect (불확실성 대비효과)는 고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에 비해 충격발생이나 그 예측 및 대비방법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혹은 공간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지역경제 안정성의 제고는 지역의 경제적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소결과 시사점

지역의 포용성은 공간을 배제한 단순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도, 한 편으로는 극단적인 공간적 배제 관점에서의 논의로만 이어가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의 포용성은 소득분배 및 소득 계층간 분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이와 연관된 저소득층의 주거지 분리 및 밀집과 같은 공간적 분리 현상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위의 문제와 현상들이 파생, 증폭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 역시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경제적 배제는 필연적으로 공간상에서 나타나며, 결국 다양한 경제적 기회요

인으로 부터 배제되는 특정 공간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정 배제공간은 순환누적 인과 관계를 통해 점차 고착화되어 오히려 특정 공간이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적 배제의 형성과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지역단위의 소득분배 문제는 단순히 단편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같은 성과의 특성과 연결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 정도라는 자체가 특정한 경제적 성과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성과의 맥락 속에서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포용성을 측정,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두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역 포용성과 관련된 모든 요소나 지표, 변수들을 망라하여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포용성의 논의를 경제적 측면으로 축소 및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포용성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득분배”를 지역의 포용성 진단 및 측정의 중심에 놓고 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간 자료 구득의 제한으로 인해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다 못했던 지역의 소득분배 및 공간분리 현상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지역 포용성 진단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성과의 특성들이 (예, 지역경제 성장의 속도와 불안정)들이 지역의 소득분배 및 공간적분리,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등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이들과 관련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들을 실증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3

CHAPTER

지역경제 포용성 및 성과의 측정

1. 지역경제 포용성 측정 | 41
2. 지역경제 성과 측정 | 59
3. 소결과 시사점 | 66

지역경제 포용성 및 성과의 측정

본 장에서는 공간정보를 지닌 개인소득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소득불평등, 공간적분리 등의 지역경제 포용성을 측정하는 방법 및 그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장과 안정으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 방법, 그리고 그 측정 결과를 역시 제시하였다.

1. 지역경제 포용성 측정

1) 포용성 측정을 위한 통계 자료

지역 포용성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및 출처는 <표 3-1>과 같다.

표 3-1 | 포용성 측정에 활용된 통계자료 및 출처

개념	측정부문	활용 통계	출처
포용성	소득 분배 구조	개인소득데이터	금융 빅데이터(KCB)
	소득에 따른 공간 분리		
	경제활동 참여(기회)	고용률 ¹⁾	인구총조사(2010, 2015)

주: 모든 자료는 시, 군, 구 단위에서 집계

1)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금융 빅데이터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금융 빅데이터는 전 국민 중 만 18세 이상, 신용정보법에 따른 경제활동 경험인구 4,200만 명의 직업, 소득, 소비, 부동산, 채무 등의 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자료 중에서 읍·면·동 수준의 공간정보를 지니고 있는 약 1,600만~1,700만 명 (2009년 ~ 2016년) 수준의 소득자료²⁾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지역경제 포용성 측정

본 연구에서 지역 포용성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1)소득 분배, 2)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3)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 세 가지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1) 소득 분배 구조 측정

본 연구에서 지역 단위 소득 분배 구조는 소득 분배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지니계수(Income Gini Index)를 통해 측정하였다. 소득지니계수는 인구나 가구 간 소득누적점유율과 가구누적점유율을 활용하여 측정되는데, 소득이 인구나 가구 간에 완전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가상의 경우와 실제 소득 규모 순으로 나열했을 때 차이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3-1>과 <그림 3-2>는 2009년과 2016년 각 년도 별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소득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두 시점 모두 서울의 강남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니계수를 보이는 시, 군, 구가 위치하는 것

2) KCB 소득추정모형은 금융회사 및 개인이 등록한 자기소득정보(연기준 약 200만명)를 활용, 7개의 그룹(급여소득자-대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외 외감대상기업/기타), (자영업자-전문(직)자영업/일반자영업), (기타)로 세분화하여, 해당 고객의 최근 2년 내 주요 신용정보(신용카드 이용금액, 대출상환액, 신규대출약정금액, DTI 추정정보 등)를 활용 소득을 추정하고 있으며, KCB가 제공한 소득정보는 해당소득 산출시점 소득으로 해석되어 금융회사들의 신용거래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으로 나타났다. 두 지도 모두 동일한 지니계수 분류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목할 점은 2009년에 비해 2016년에 중간그룹 이상의 지니계수 수치를 보이는 지역의 개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즉, 국가전체의 소득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시, 군, 구라는 공간단위에서의 소득불평등 수준 역시 2009년에 비해 2016년 심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과 서해안 지역과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집중해서 나타난 것으로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로 소득지니계수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소득지니계수 변화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시,군,구가 <표 3-2>에 나타나 있다.³⁾

표 3-2 | 소득지니계수 상하위 10개 시, 군, 구

상위 / 하위	2009	2016	2009-2016 (변화)
상위 10개 시,군,구	강남구	용산구	용산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수성구
	송파구	분당구	함양군
	분당구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양천구	의성군
	광진구	수성구	영양군
	과천시	광진구	부산 남구
	종로구	과천시	부산 연제구
	일산동구	일산동구	수원 영통구
하위 10개 시,군,구	군위군	군위군	곡성군
	의령군	웅진군	웅진군
	고령군	의령군	진도군
	웅진군	청도군	화천군
	남해군	곡성군	군위군
	장수군	임실군	인제군
	임실군	고령군	양평군
	청도군	진도군	성남 수정구
	진안군	남해군	청도군
	순창군	화천군	영광군

3) 실제 지니계수 측정결과는 부록 2 에 제시

그림 3-1 | 시, 군, 구 지니계수 측정결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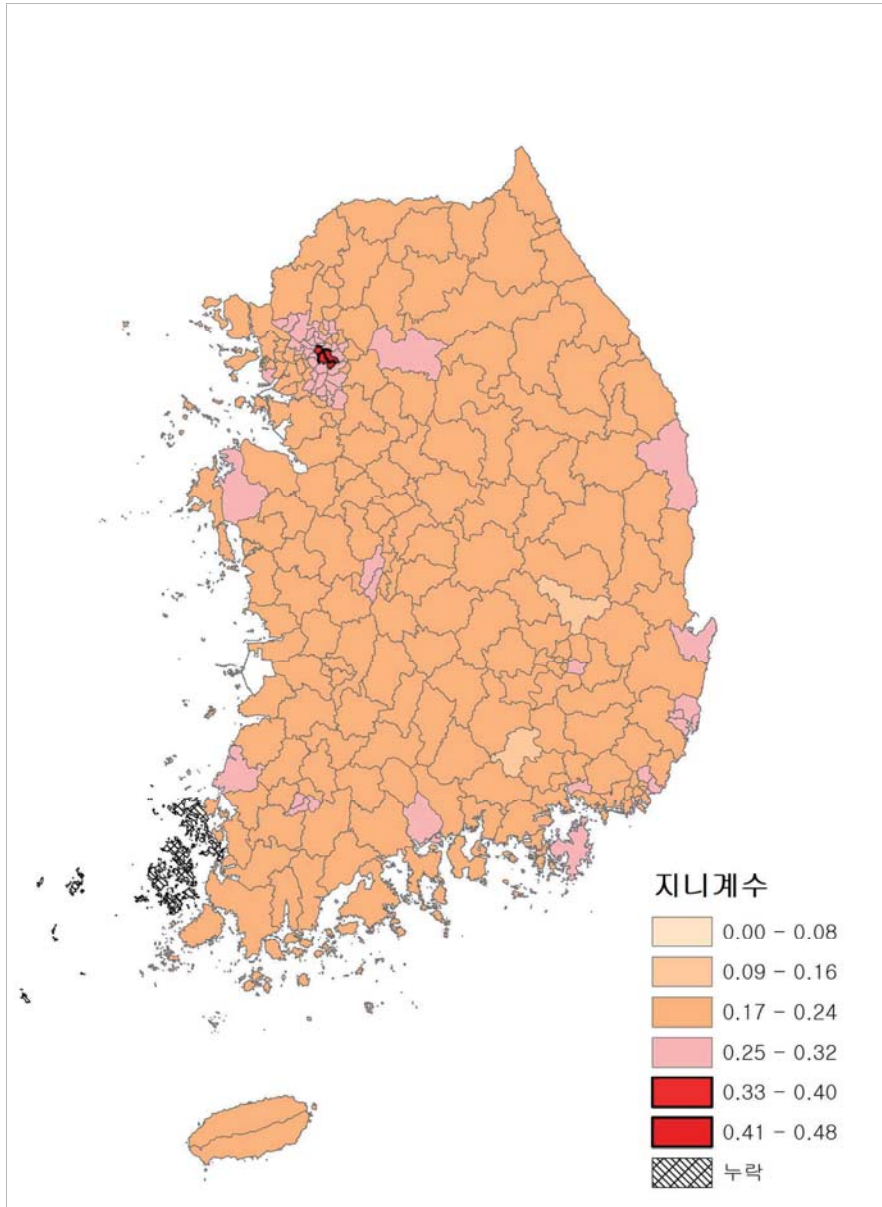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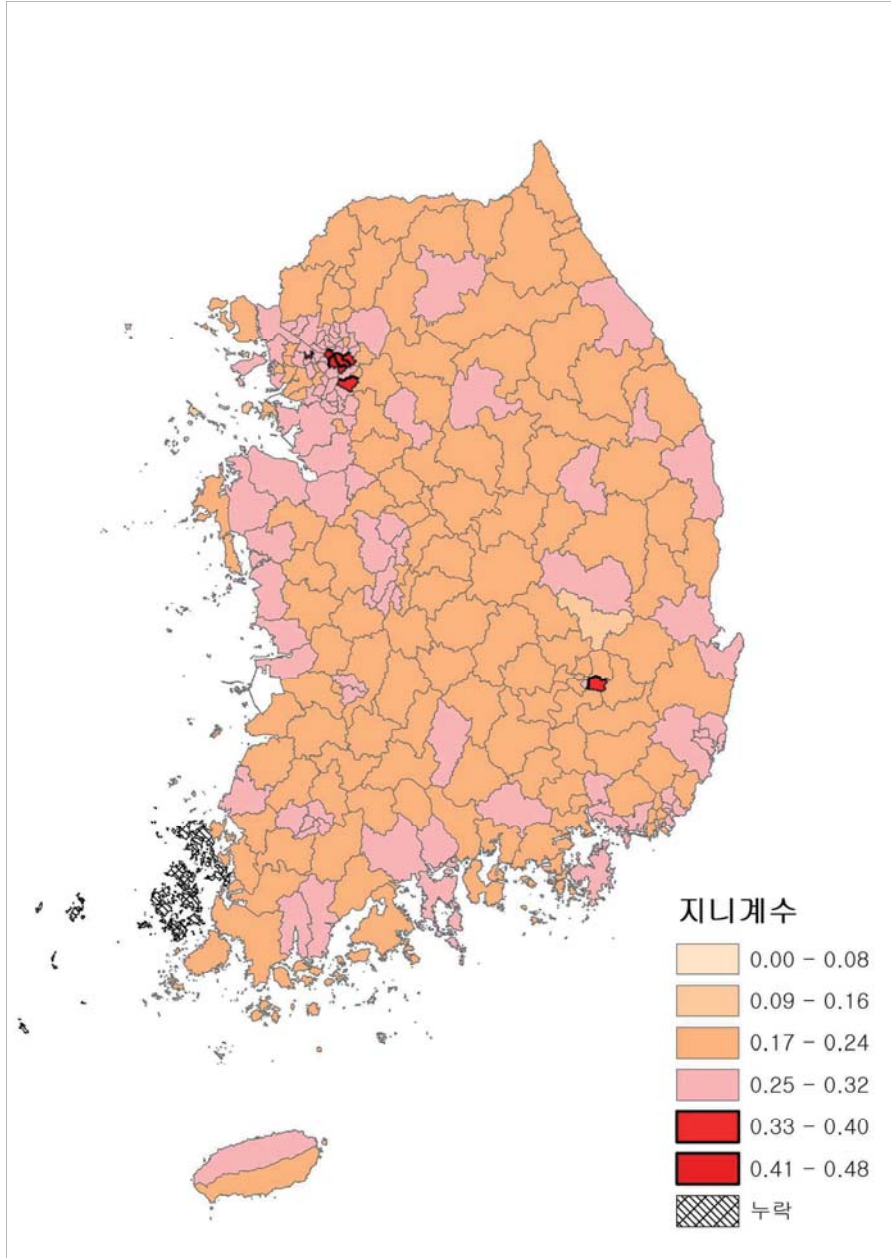


그림 3-2 | 시, 군, 구 지니계수 측정결과, 2016



이른 바 높은 주택가격 및 고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3구 - 서초, 강남, 송파 -를 비롯한 용산, 목동이 포함된 양천 등이 높은 수준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분당, 일산동구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수성구 역시 2016년 기준 상위 10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 전북, 경남, 강원도의 군 지역들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에서는 하위, 즉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소득분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용산, 서초, 강남의 지역은 높은 소득불평등 정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화되는 규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개발된 대구 수성이나 수원 영통의 높은 소득지니 계수 변화도 주목된다.

(2)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측정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 이외에 이러한 소득격차가 공간적 분리(Spatial segregation)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실증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도시 및 지역 소득 혹은 인종 그룹간의 분리지수(Segregation index) 중의 하나인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활용하였다. 비유사성지수는 각 지역별로 국가전체 중위소득의 절반 값 미만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인구그룹을 빈곤계층으로 분류하여 해당 인구들이 지역 내에 어떠한 공간적 형태 - 균질하게 혹은 군집하여 - 로 분포하는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단위는 시, 군, 구를 의미하며 지역 내의 공간적 분포 형태는 읍, 면, 동 단위에서 측정, 지역(i)의 비유사성지수(DIS)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⁴⁾하였다.

4) https://www.census.gov/hhes/www/housing/respseg/pdf/app_b.pdf

$$DIS_i = \frac{\sum_{m=1}^M [t_m \times |(p_m - P)|]}{2T \times P \times (1 - P)}$$

T : 지역 전체 인구 규모, P : 지역 전체 인구 대비 빈곤인구 비중,
 m : 지역 i 내 하위 공간단위 (시·군 내의 읍·면·동), t_m : 하위 공간 m 의 인구규모,
 P_m : 하위 공간 m 의 빈곤인구 비중

값이 “0” 에 가까울수록 다른 그룹과 통합되어 분포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분리되어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3-3>과 <그림 3-4>는 2009년과 2016년 각 년도 별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공간분리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동일한 지수 분류기준을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2009년에서 비해서 2016년 공간분리정도가 증가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경우 동해안과 경북, 전북 내륙 지역으로 이러한 증가가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높은 시, 군, 구 내에서 읍과 특정한 공간 거점으로 인구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 지역 역시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소득증가 수준을 보이는 지역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 증가와 같은 경제적 수혜가 공간적으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3 | 시, 군, 구 비유사성지수(공간분리지수) 측정결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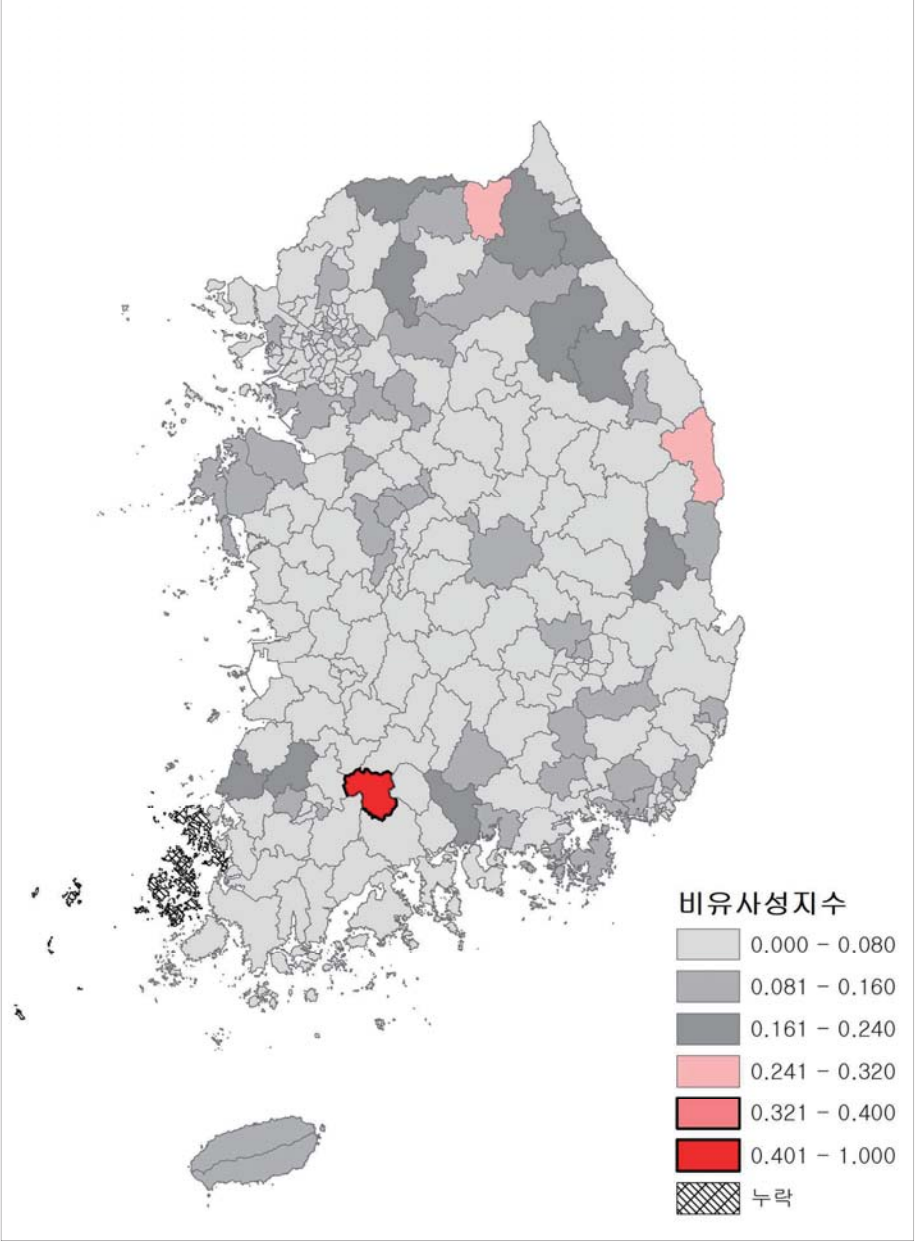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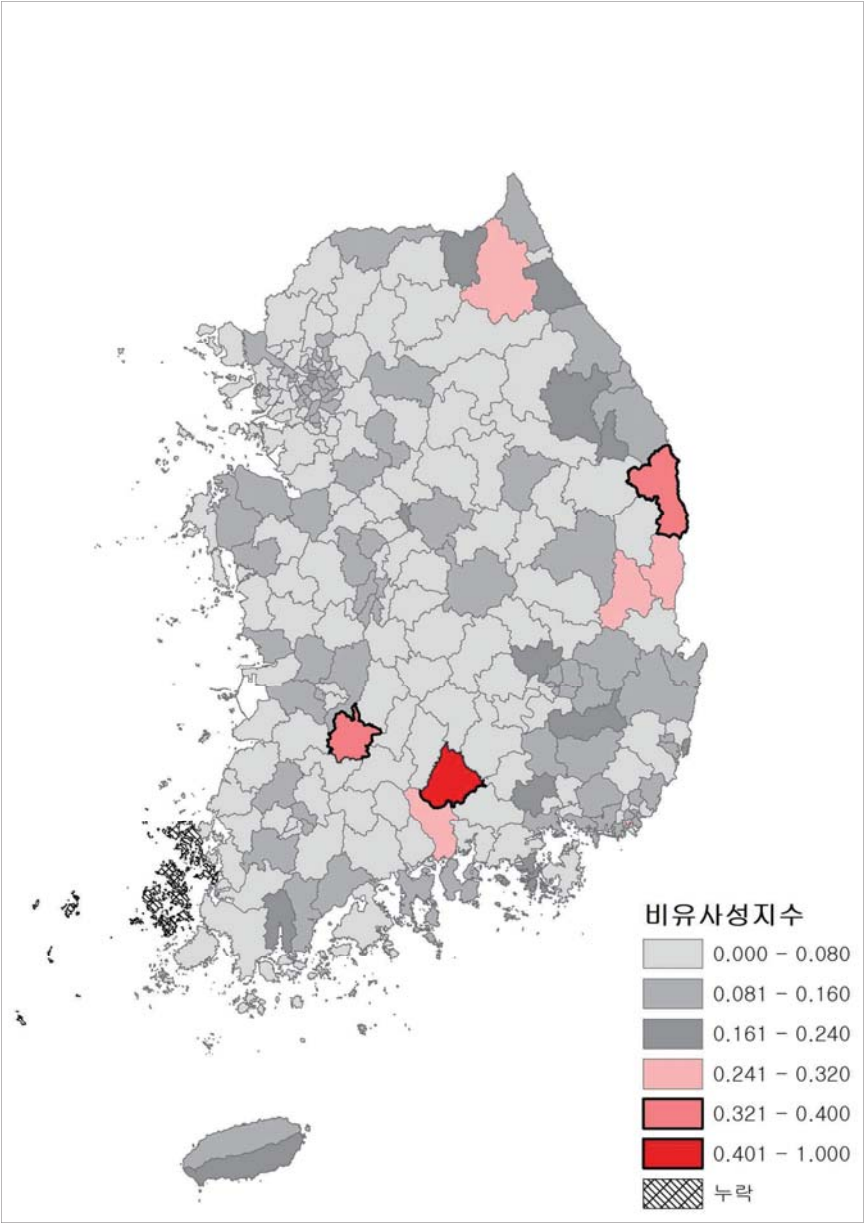


그림 3-4 | 시, 군, 구 비유사성지수(공간분리지수) 측정결과, 2016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로 비유사성지수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비유사성지수 변화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시, 군, 구가 <표 3-3>에 나타나 있다.⁵⁾

표 3-3 | 공간분리지수 상하위 10개 시,군,구

상위 / 하위	2009	2016	2009-2016 (변화)
상위 10개 시,군,구	울진군	산청군	임실군
	양구군	울진군	산청군
	가평군	임실군	강진군
	평창군	인제군	부산 동구
	영광군	청송군	대구 중구
	철원군	부산동구	함안군
	하동군	영덕군	고성군
	장성군	하동군	영덕군
	양양군	함안군	인제군
	정선군	강진군	칠곡군
하위 10개 시,군,구	화순군	곡성군	곡성군
	순창군	예천군	가평군
	부안군	화순군	평창군
	의성군	영월군	영광군
	고성군	예산군	철원군
	영월군	횡성군	홍천군
	합천군	영암군	태안군
	강진군	논산시	예천군
	정흥군	영동군	하남시
	무주군	부안군	양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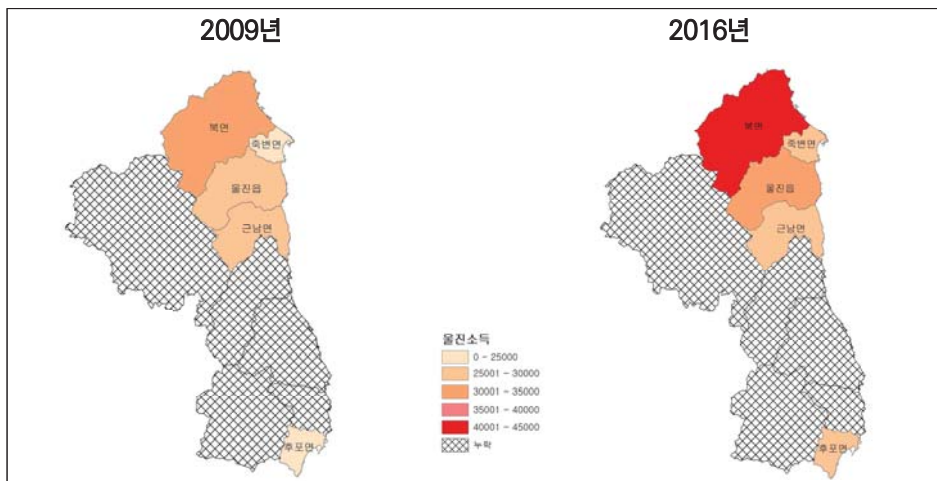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비유사성지수의 경우 상, 하위 시, 군, 구 모두 대도시 지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대도시에서

5) 실제 비유사성지수 측정결과는 부록 2 에 제시되어 있으며, 하위 읍,면,동 단위의 소득자료 부재등으로 인해 비유사성지수가 측정되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읍,면,동만 포함되어 이상측정치가 관찰된 경우에는 순위 산정 및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가 있는 비도시지역의 시, 군, 구 들이 상하위에 포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시, 군의 경우 일부 고소득층 계층이 읍사무소 소재지를 비롯한 이른바 시가화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하위의 경우 개인소득의 공간자료가 구득된 읍, 면, 동 지역이 시, 군, 구 내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그 소득 수준마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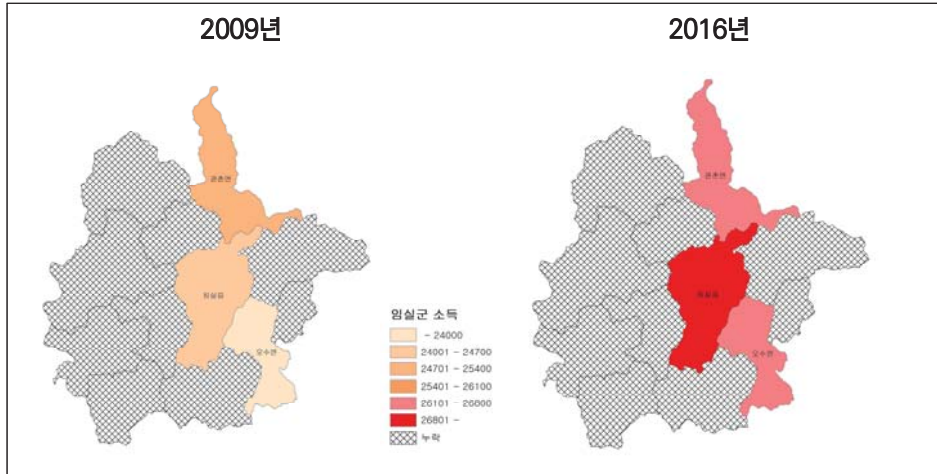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시, 군, 구의 공간분리지수의 분포를 구체화하여, 공간분리지수 산출의 공간단위인 시, 군, 구 내 읍, 면, 동 수준의 평균소득을 활용, 특정 지역 별로 세밀하게 하위 공간단위에서 소득분포를 관찰할 수 있다. 먼저 2009년과 2016년 공통적으로 공간분리지수 측정결과 상위에 올라있는 울진군의 읍, 면 수준에서의 평균소득 분포가 아래 <그림 3-5>에 나타나있다.

그림 3-5 | 울진군 내 읍, 면 간 평균소득 (2009, 2016)



일부 읍, 면의 경우 가용한 소득 통계가 부재하여 누락되어 있다. 단순히 두 시점 간 지도를 비교해보면 2009년 비해 2016년 읍, 면 간 평균소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읍, 면간 평균소득 격차는 북면과 울진읍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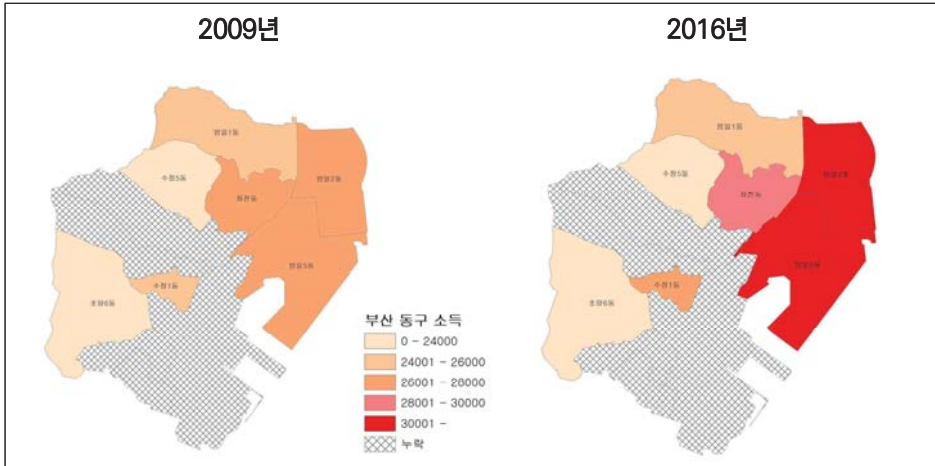
그림 3-6 | 임실군 내 읍, 면 간 평균소득 (2009, 2016)



울진군과 유사하게 <그림 3-6>에 나타나 있는 임실군 역시 2009년에 2016년 읍, 면 간 평균소득의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임실읍의 높은 평균 소득 수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인구 과소 지역의 평균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과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수로 인해 특정 지역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갑작스런 소득 증가가 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모두 지역 내 읍, 면 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의 소득 집중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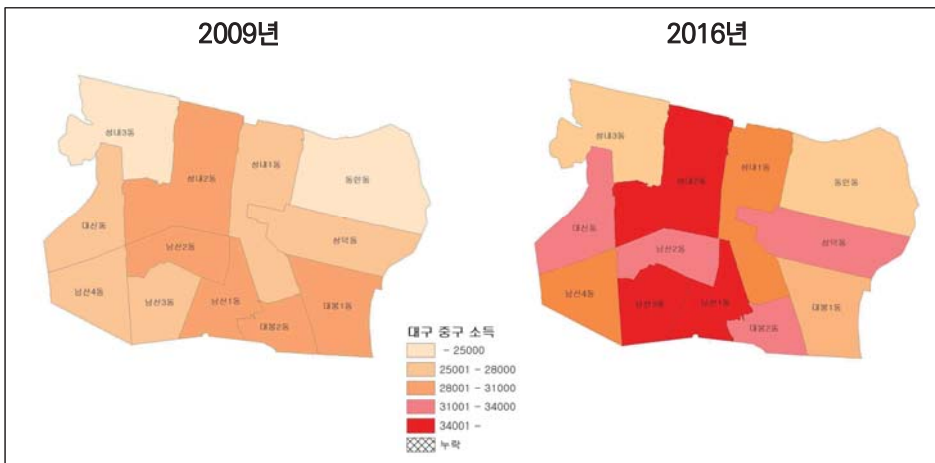
<그림 3-7>은 도시지역 중에 높은 공간분리지수 증가수준을 보인 부산 동구의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의 구 내부 동 단위에서 평균소득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높은 공간분리지수 증가의 원인이 지도 상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2009년과 2016년 사이 초량6동이나 수정1, 5동, 범일 1동의 평균소득 수준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좌천동, 범일 2, 5 동 등의 경우 급격한 평균소득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고가의 주택공급이 공간적 분리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7 | 부산 동구 내 동 간 평균소득 (2009, 2016)



<그림 3-8>은 부산 동구와 유사하게 높은 공간분리지수 증가 수준을 보인 대구 중구의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에서의 구 내 동 간 평균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3-8 | 대구 중구 내 동 간 평균소득 (2009,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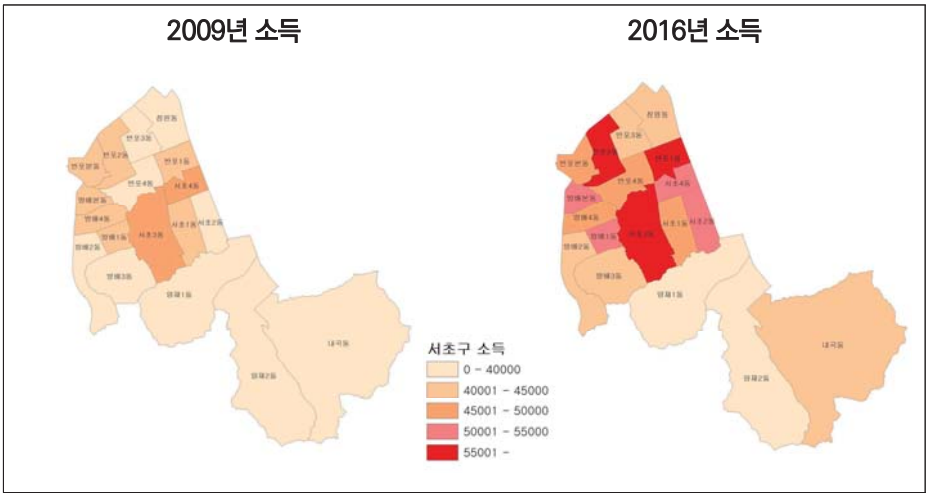


부산 동구와 다르게 현재 지도에 표시된 대다수의 동에서 평균소득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나, 그 증가 수준이나 규모를 보면 성내 2동, 남산 1, 3동 및 남산 2동, 대신

동, 상덕동, 대봉 2동의 2016년 소득 수준이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 동구와 마찬가지로 대구 중구 역시 남산동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 개발이 이러한 공간분리 현상 심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위 분석과는 별도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간분리지수 증가를 보인 서초구의 동 별 평균소득 분포 변화를 관찰했다.

그림 3-9 | 서울 서초구 내 동 간 평균소득 (2009, 2016)



<그림 3-9>를 보면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에도 2009년과 2016년 사이 구 내 동별 평균소득의 증가와 분포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재동과 내곡동이 아닌 방배, 서초, 반포동 쪽의 평균소득 수준과 증가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반포 1, 2동, 서초 3동을 비롯한 서초 2, 4동, 방배본동 등의 평균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실시되거나 계획 중인 위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부산 동구, 대구 중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재건축이나 새로운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이 소득에 따른 공간 분리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측정

본 연구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지역 포용성의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혹은 기회의 균형 부분이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공간적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부 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정보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포용 관점에서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와 기회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Brookings Institute(2016)는 소득분배와 관련한 기존 포용성 측정 지표 이외에 기회 균등 측면에서 각 지역별 고용률을 포용성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고용률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경제활동인구(15-64세) 규모 대비 동일 연령구간의 실제 취업자수 비율로 측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단위의 15-64세 취업자수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64세 제한 없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의 비중을 고용률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0년과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고용률 및 두 시점 사이의 고용률 변화를 측정하였다.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률의 산정 시 64세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취업자수 규모를 활용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고령인구가 많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군 단위 지역의 고용률이 높게 측정되고 있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은 일부 광역시의 특정 시군의 낮은 고용률 수준 역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 물론 연령대별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나 기회 측면에서 단순히 대도시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는 기존의 통념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라는 판단이 든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지역 경제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할 변화이자 현상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경우, 시군구 전반적으로 고용률의 감소가 관찰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실업률 증가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림 3-10 | 시, 군, 구 고용률 측정결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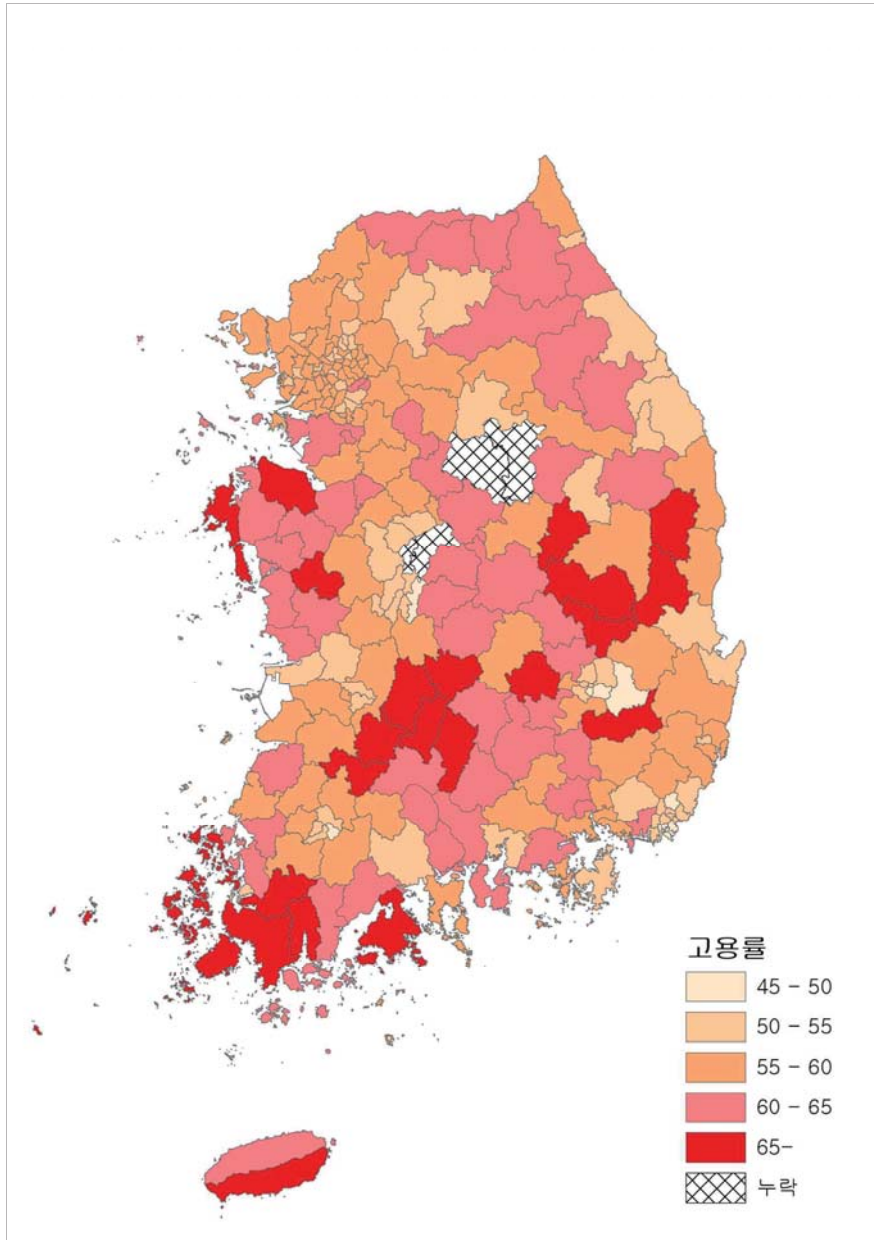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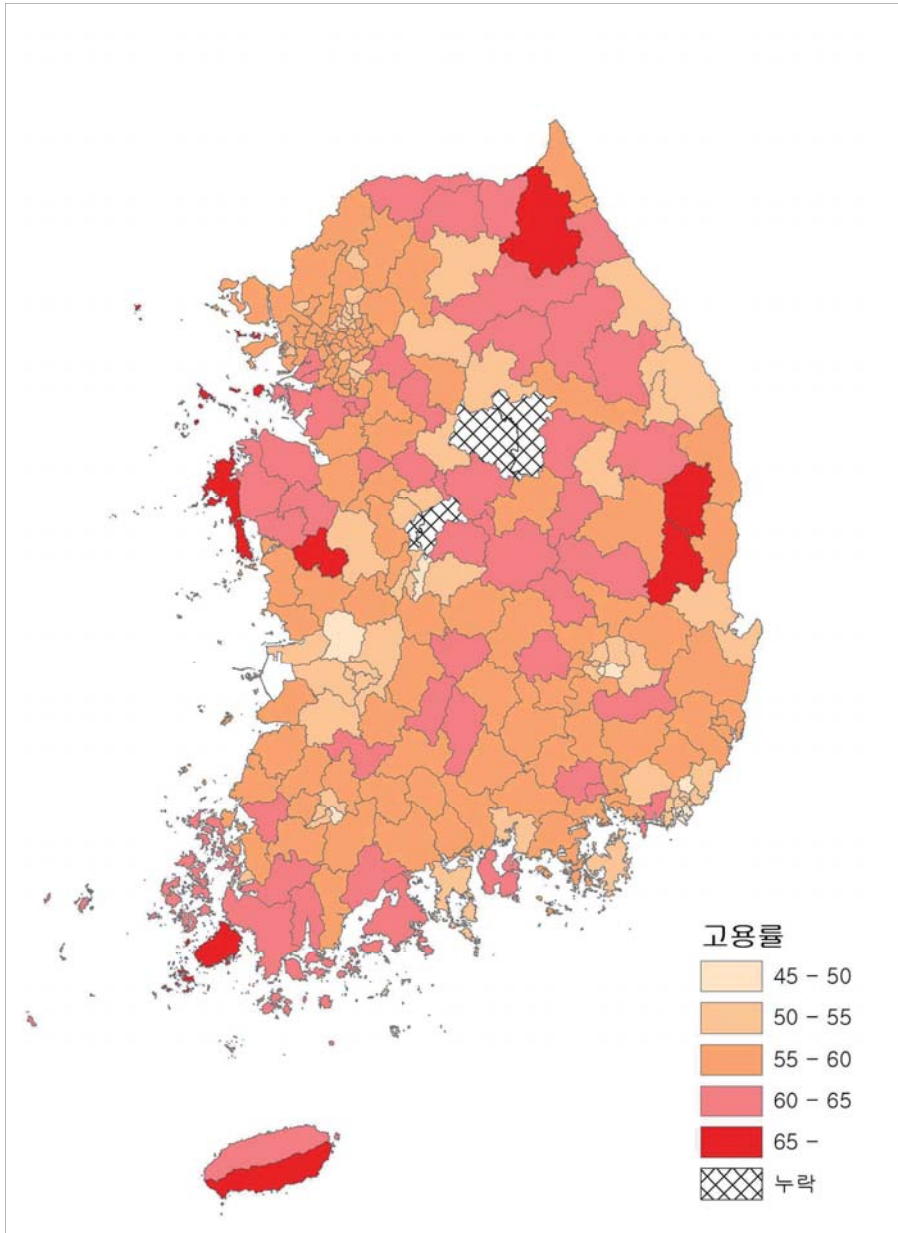


그림 3-11 | 시, 군, 구 고용률 측정결과, 2015



각 연도별로 고용률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고용률 변화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시, 군, 구가 <표 3-4>에 나타나 있다.⁶⁾

표 3-4 | 고용률 상하위 10개 시,군,구

상위 / 하위	2010	2015	2010-2015 (변화)
상위 10개 시,군,구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청송군	충북 증평군
	경북 영양군	충남 태안군	강원 인제군
	전남 영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사천시
	충남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	강원 화천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기 군포시
	경북 의성군	전남 진도군	울산 동구
	제주 서귀포시	충남 청양군	경기 김포시
	전북 진안군	강원 인제군	충남 계룡시
	전북 장수군	전북 장수군	전남 화순군
하위 10개 시,군,구	부산 영도구	부산 영도구	전남 신안군
	광주 동구	광주 동구	전북 진안군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충북 괴산군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경북 군위군
	대구 남구	부산 서구	충북 옥천군
	부산 금정구	부산 동구	전남 영암군
	부산 남구	부산 남구	경기 양평군
	경북 경산시	대전 동구	경북 합천군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하동군
	대전 동구	전북 익산시	충북 영동군

고용률 변화를 보면 군포나 김포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들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나 대부분 대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군 단위 지역이 상위에 포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고용률 평균이 감소했다는 점이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참여와 기회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6) 실제 고용률 측정결과는 부록 2 에 제시되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2010년 자료와 청주시로 통합된 이후인 2015년 자료 사이의 공간적 범역이 달라 제외하였음

2. 지역경제 성과 측정

1) 성과 측정을 위한 통계 자료

지역 경제성과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및 출처는 <표3-5>과 같다.

표 3-5 | 지역경제 성과 측정에 활용된 통계자료 및 출처

측정부문	활용 통계	출처
지역 성장	일자리수	전국사업체조사
	평균소득	금융 빅데이터(KCB)
지역 안정	일자리수	전국사업체조사

주: 모든 자료는 시, 군, 구 단위에서 집계

2) 지역경제 성과의 측정

본 연구에서 지역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 경제 성과는 성장과 안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성장의 경우, 연평균 시군구 일자리수 증가율평균소득의 증가율로 측정하였다. 안정성의 경우 불안정성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지역성장의 측정

본 연구에서 지역의 성장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두 시점 사이 증가율과 총일자리수의 연평균 성장률로 측정하였다. 총일자리수의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가 성장했는가를 의미하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G_i = \frac{\sum_{t=2}^T \left[100 \times \frac{Y_{i,t} - Y_{i,t-1}}{Y_{i,t-1}} \right]}{T-1}$$

T : 분석기간 총 연도수, $Y_{i,t}$: 지역 i 의 t 연도의 총고용 규모

소득의 경우 부산 강서, 용산, 강원도 일부 군들의 성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수는 세종, 부산 기장, 인천 연수 등의 성장세가 빠른 것으로 관찰된다. 반면, 최근 주력 산업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경남 통영의 경우 증가율이 음수를 기록하여 절대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경우, 4개의 구가 일자리수 증가율 하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운대구의 경우 평균을 훨씬 웃도는 5.76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내 성장의 격차가 심각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 사이 소득 증가율과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 상하위 10개 시, 군, 구가 <표 3-6>에 제시되고 있다.

표 3-6 | 경제성장 측정결과 상하위 10개 시,군,구

상위 / 하위	평균소득증가	일자리수증가
상위 10개 시,군,구	부산 강서구	세종시
	서울 용산구	부산 기장군
	강원 인제군	인천 연수구
	강원 화천군	충남 당진시
	강원 양구군	경기 성남 분당구
	충남 당진시	경기 화성시
	경북 울진군	서울 강서구
	충남 아산시	경기 파주시
	전북 완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 서초구	충남 아산시
하위 10개 시,군,구	전남 곡성군	경남 통영시
	인천 강화군	경기 과천시
	전북 부안군	부산 동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북구
	경북 청도군	부산 사상구
	경기 성남 수정구	부산 중구
	서울 도봉구	경북 합천군
	경기 과천시	부산 사하구
	경북 예천군	강원 동해시
	경남 밀양시	마산 회원구

그림 3-12 | 시, 군, 구 평균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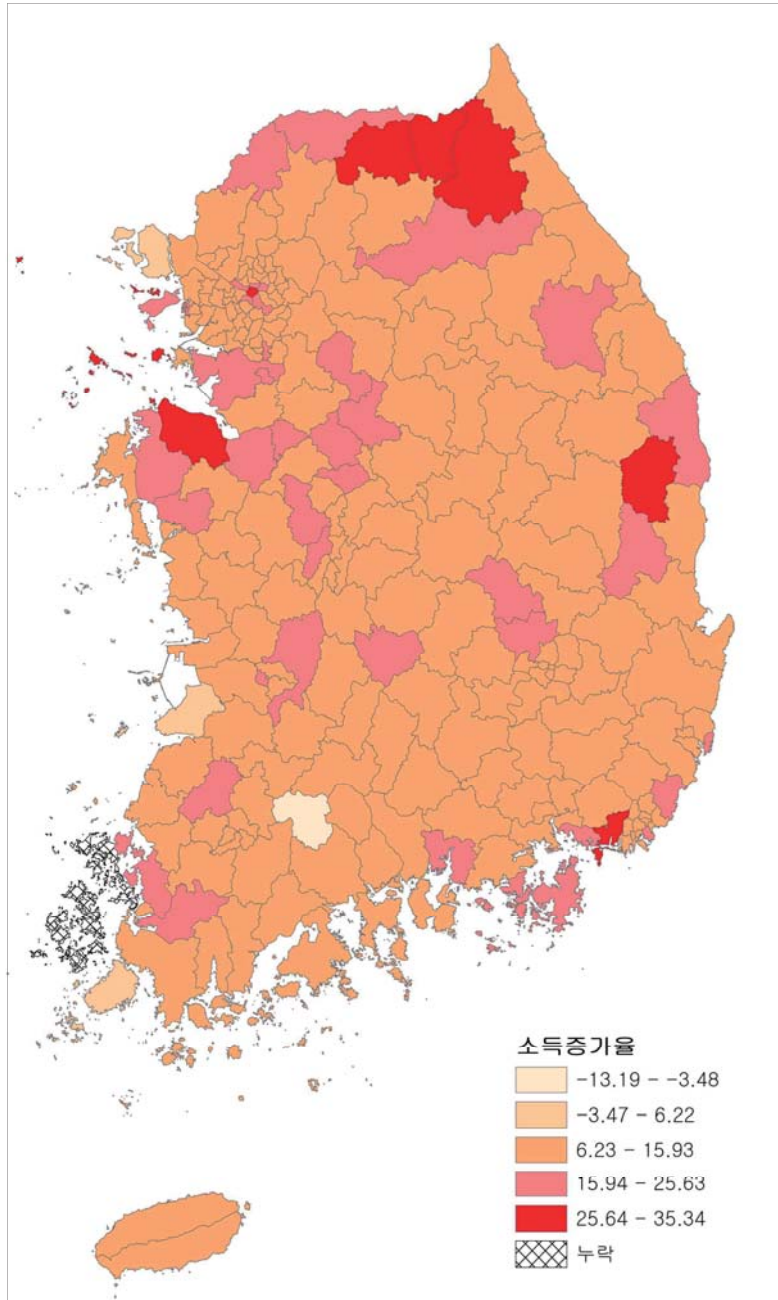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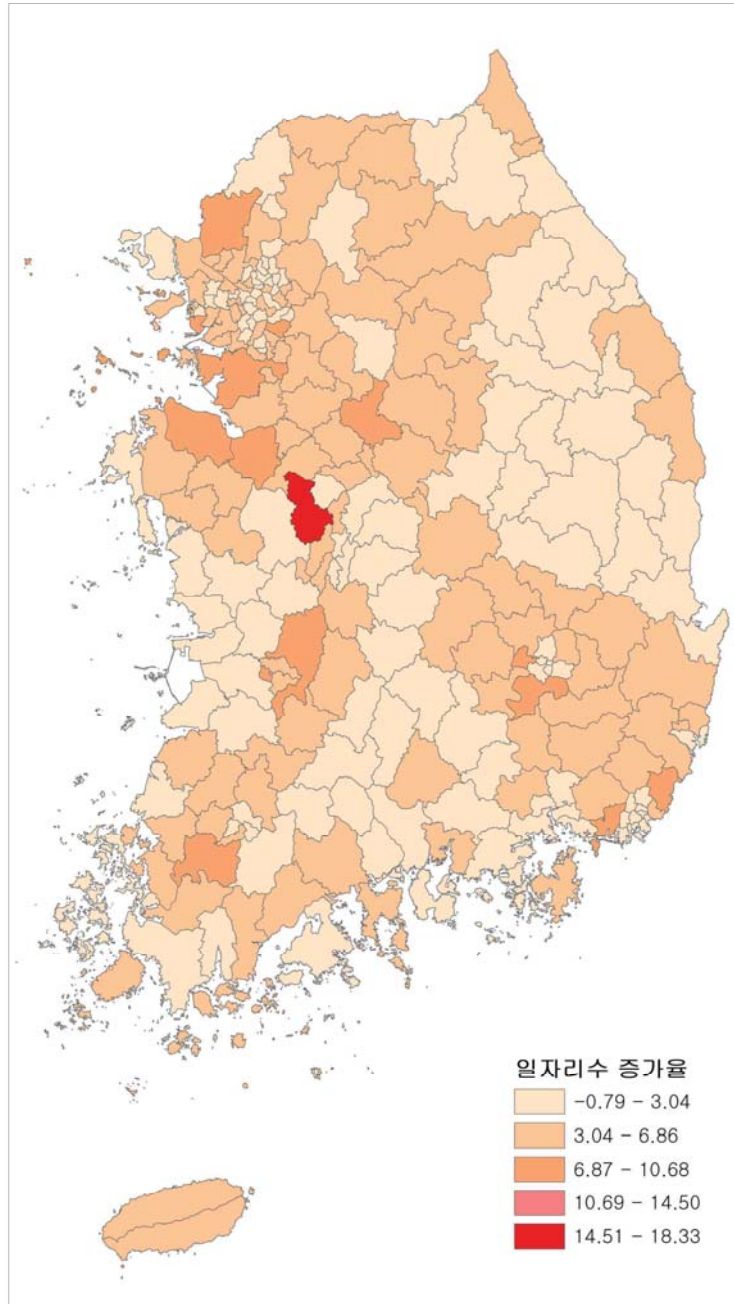


그림 3-13 | 시, 군, 구 연평균 일자리수 증가율



(2) 지역(불)안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성은 Kort(1981)가 제안한 지역경제불안정지수(Regional Economic Instability Indicator)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Kort(1981)는 일정기간 동안 지역 내 경제지표의 변동정도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불안정을 측정하였다. 지역(i)의 불안정은 연도별 지역의 총소득과 총고용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Instab_i = \left\{ \frac{\sum_{t=1}^T [(Y_{i,t} - Y_{i,t}^{Tr}) / Y_{i,t}^{Tr}]^2}{T} \right\}^{0.5}$$

T : 분석기간 총 연도수, $Y_{i,t}$: 지역 i 의 t 연도의 총소득 혹은 총고용 규모,

$Y_{i,t}^{Tr}$: 추세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지역 i 의 t 연도의 총소득 혹은 총고용 기대치

즉, 위의 측정결과 값이 클수록 불안정성 정도가 큰 것으로, 반대로 안정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시, 군, 구 단위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연도별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총일자리수의 활용하여 지역의 불안정 정도를 측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안정성 상위 및 하위 10위 까지 시, 군, 구가 <표 3-7>에 제시⁷⁾되고 있다.

불안정성 측정결과가 높은, 즉 불안정한 지역 중 수원 영통, 나주 등의 지역은 급격한 일자리수 증가가 이러한 높은 불안정성을 야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주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경남 고성, 통영의 경우 주력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상승세의 추락이 이러한 높은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불안정성 측정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적인 시, 군, 구의 경우 포천이나 인천 서구, 대전 유성 등의 지역은 성장 속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7) 불안정성 측정결과는 부록 2 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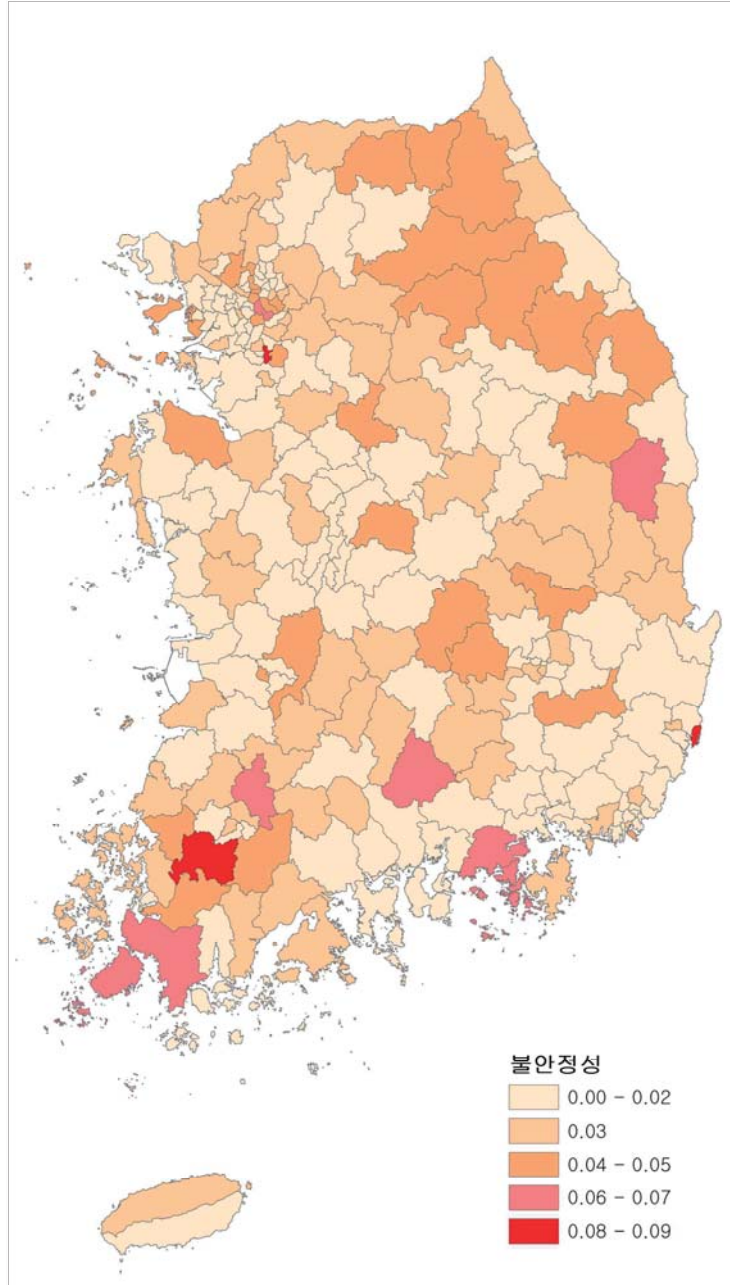
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부산 사상이나 대구 북구의 경우 낮은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이른바 정체된 지역경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3-7 | 일자리수 불안정성 상하위 10개 시,군,구

상위 / 하위	시,군,구
상위 10개 시,군,구 (불안정한 지역)	전남 나주시
	울산 동구
	경기 수원 영통구
	경남 산청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서울 서초구
	전남 영암군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하위 10개 시,군,구 (안정적인 지역)	경기 포천시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기 평택시
	대구 북구
	전남 여주시
	충북 청주 서원구
	대전 유성구
	경기 일산 동구
	대구 서구

갑작스런 고용 증가로 인한 높은 불안정성이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상승의 결과나 손해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고, 동시에 외부 충격 하에서 갑작스런 하락으로 연결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포용성과의 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14 | 시, 군, 구 일자리수 불안정성



3. 소결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 포용성 측면에서 소득불평등, 공간분리, 경제활동 참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각각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성과 차원에서는 고용과 소득 성장을, 안정성 측면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성장률 및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포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군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2009년에 비해 2016년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및 서해안 지역과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가 관찰되었다. 소득불평등도와 유사하게 공간분리 역시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동해안과 경북, 전북 내륙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소득수준과 소득증가 수준을 보이는 지역들에서도 이러한 공간분리 현상의 악화가 관찰되었다. 고용률로 측정된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6년 전반적인 고용률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성과 측면에서, 먼저 소득 성장의 경우 서울 용산과 부산 강서 등의 높은 성장세가 관찰되었으며 일자리 성장의 경우 세종, 인천 연수 등의 신도시의 성장세가 관찰되었다. 반면 주력 산업의 분야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통영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수원 영통이나 전남 나주의 경우 대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급격한 고용증가가 불안정성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짐작되며 경남 고성이나 통영의 경우 반대로 주력 산업의 부진이 불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포용성 구성요소 간 연관관계 및 다양한 경제적 성과 하에서의 이러한 연관관계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며, 동시에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도 실증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4

CHAPTER

지역경제 포용성의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

1.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의 연관관계 분석 | 69

2. 지역 포용성의 결정요인 분석 | 78

3. 소결과 시사점 | 85

지역경제 포용성의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측정된 각 개념 간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포용성을 구성하는 각 개념간의 관계 및 지역경제 성과와 포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 수준, 경제적 성과 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위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특성 하에서 지역의 소득분배구조와 공간적 분리 현상 등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포용성 및 지역경제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적 검증을 통해 어떠한 지역의 특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역 포용성 및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1.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의 연관관계 분석

앞 장에서 제시된 지역 포용성을 구성하는 각 개념들의 이론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지역 포용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1)소득분배, 2)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3)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및 기회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및 분석하였다. 각 구성 요소 간의 이론적 관계 혹은 제안되는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①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라, 소득계층간의 공간분리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지니계수가 증가한 지역들의 경우 공간분리지수 역시 증가
- ②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현상이 심해지면, 분리되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나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 공간분리지수 증가한 지역들의 경우 고용률 감소

전체 시, 군, 구¹⁾를 대상으로 하는 상관관계 분석과 동시에 소득 수준, 경제적 성과에 따라 시, 군, 구를 유형화하여 아래 <표 4-1>과 같이 각 그룹별로 연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어떠한 경제적 성과에서 이러한 연관관계가 보다 확실히 관찰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수준은 국가전체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계층을 빈곤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시군구별로 빈곤계층 비율을 계산하고 우리나라 전체 빈곤계층 비율을 기준으로 기준 보다 높은 빈곤계층 비율을 보이는 시군구를 빈곤지역, 기준 보다 낮은 빈곤계층 비율을 보이는 시군구를 빈곤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 각각의 유형별로 연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성과는 앞서 측정된 경제적 성과지표 - 평균소득증가율, 연평균 일자리수 증가율, 일자리수 안정도 - 를 토대로 시군구 전체 평균과 각 시군구별 성과지표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시군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연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 | 시군구 유형화 기준 및 지표

지표	기준	유형
빈곤계층 비율	우리나라 전체 빈곤계층 비율	빈곤지역
		빈곤하지 않은 지역
소득증가율(2009~2016)	시군구 평균	소득 고성장 지역
		소득 저성장 지역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2009~2016)	시군구 평균	고속 고용성장 지역
		저속 고용성장 지역
일자리수 불안정성	시군구 평균	고용 안정 지역
		고용 불안정 지역

1) 청주시와 같이 분석 기간 동안 공간적 범위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추적할 만한 통계자료가 부재한 경우와 하위 읍,면,동 단위의 소득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 비유사성지수가 측정되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읍,면,동만 포함되어 이상측정치가 관찰된 경우에는 순위 산정 및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총 230개 시,군,구가 분석에 사용)

동시에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 ① 전체 시군구 대상, ② 광역시 외 시군구 대상, ③ 광역시 내 시군구 대상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전체 시군구 대상 분석

〈표 4-2〉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소득지니계수와 공간분리지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및 공간분리지수 변화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4-2 | 전체 시군구 연관관계 분석 결과

관계	상관계수	p-value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2651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127	0.046

위 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시, 군, 구의 경우 소득지니계수가 증가할 때, 즉, 소득 분배 구조 상 불평등이 심해짐에 따라 소득계층이 상이한 그룹들이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거주하는 현상 역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역시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분리가 심해진 지역의 경우 고용률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시사한다.

아래 〈표 4-3〉는 빈곤계층 비율을 토대로 전체 시군구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별로 위와 동일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2009년 당시 빈곤계층 비율이 국가전체 빈곤계층 비율 보다 높았던 빈곤한 시군구의 경우 2016년까지 소득불평등 변화와 공간분리 수준의 변화 사이가 통계적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 이는 이미 빈곤과 공간분리 수준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예상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의 비율이 낮았던 시군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경우 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관계가 관찰된다. 즉, 상대적 빈곤 수준이 낮았던 시군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소득불평등 정도가 악화됨에 따라 공간분리 역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고용률의 변화 역시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4-3 | 빈곤계층 비율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빈곤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402	0.751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279	0.230
빈곤하지 않은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3428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469	0.045

〈표 4-4〉는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 사이 평균소득의 증가율을 토대로 전체 시군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별로 위와 동일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소득 증가를 보인 시군구의 경우 불평등과 공간분리, 고용률 변화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균소득 증가를 보인 시군구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4 | 평균소득 증가율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소득 고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544	0.307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302	0.116
소득 저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3909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0961	0.131

〈표 4-5〉는 2009년부터 2016년 까지 시군구의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경우별로 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4-5 |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고속 고용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1985	0.026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2310	0.013
저속 고용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2926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0629	0.238

지역경제 성장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세를 보인 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공간분리, 그리고 고용률변화 사이의 연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느린 경제적 성장 속도를 보인 시군구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공간적 분리 사이는 선명한 관계를 보인 반면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 | 일자리수 불안정성에 따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고용 안정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177	0.415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645	0.024
고용 불안정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4079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0881	0.4371

〈표 4-6〉는 2009년부터 2016년 까지 시군구의 연도별 일자리수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된 불안정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을 두 유형으로 분류, 각각의 경우별로 위와 같

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경제 성과를 보이는 시군구에서는 공간분리지수의 변화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성과가 안정화된 지역에서는 이미 고착화된 불평등과 공간분리를 토대로 경제적 참여 혹은 기회의 제한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반대로 불안정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시군구의 경우 아직은 공간분리가 고용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유의하게 관찰이 되지 않는 대신 불평등의 증가와 공간분리 심화 사이의 관계는 매우 선명하게 관찰된다.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 공간분리, 고용률 변화 사이의 연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공간분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관계 정도는 아니지만 공간분리정도 역시 기회제한을 통해 고용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관계는 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거나 소득증가 규모가 낮은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하거나 일자리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지역에서 공간분리가 고용률의 변화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광역시 외 시군구 대상 분석

〈표 4-7〉는 광역시 외 시군구의 포용성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보다 상관관계의 정도 및 통계적 유의성이 더욱더 확실하게 관찰된다. 즉, 비도시지역이 포함되는 광역시 외 지역에서 소득불평등 증가는 공간적 분리증가와 더욱더 확실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분리의 심화 역시 고용률 변화와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7 | 광역시 외 시군구 연관관계 분석 결과

관계	상관계수	p-value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3620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809	0.013

〈표 4-8〉는 빈곤계층 비율을 토대로 광역시 외 시군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별로 위와 동일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 | 빈곤계층 비율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빈곤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773	0.281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144	0.203
빈곤하지 않은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4540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2128	0.019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던 분석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상관관계의 정도 및 유의성 역시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표 4-9〉는 평균소득의 증가율을 토대로 광역시 외 시군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경우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 시군구 분석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소득 증가를 보인 시군구의 경우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된다. 즉 광역시 외 시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지역들에서 공간분리가 경제활동 참여의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

러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균소득 증가를 보인 시군구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9 | 평균소득 증가율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소득 고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023	0.493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2525	0.028
소득 저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5521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342	0.101

〈표 4-10〉는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광역시 외 시군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별로 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0 | 일자리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고속 고용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2174	0.039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2922	0.007
저속 고용성장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4298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491	0.091

전체 시군구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경제적 성장세를 보인 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공간분리, 그리고 고용률변화 사이의 연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느린 경제적 성장 속도를 보인 시군구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공간적 분리 사이는 선명한 관계를 보인 반면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관찰되었다.

〈표 4-11〉는 불안정성 지수를 활용하여 광역시 외 시군구를 두 유형으로 분류, 각각의 경우별로 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1 | 일자리수 불안정성에 따른 광역시 외 시군구 유형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관계	상관계수	p-value
고용 안정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488	0.32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2841	0.003
고용 불안정 지역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5085	0.000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1364	0.149

전체 시군구 대상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경제적 성과가 안정화된 광역시 외 시군구에서는 공간분리와 경제적 참여의 제한이 더욱 선명하게 관찰되는 반면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불안정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시군구의 경우 불평등의 증가와 공간분리 심화 사이의 관계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 반면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부정적인 경기 안정화의 예측을 감안할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한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분리와 경제적 참여의 제한과의 상관관계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 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 공간분리, 고용률 변화 사이의 연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시군구 대상의 분석 결과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관관계의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은 전체 시군구 분석 결과 보다 더 선명하게 관찰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와 이들의 연관관계는 광역시 외 시군구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광역시 내 시군구 대상 분석²⁾

〈표 4-12〉는 광역시 내 시군구의 포용성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2 | 광역시 내 시군구 연관관계 분석 결과

관계	상관계수	p-value
소득지니계수변화 & 공간분리지수변화	0.0602	0.304
공간분리지수변화 & 고용률변화	0.0721	0.269

상대적으로 동질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광역시 내 시군구 대상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그리고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간적 분리 측면에서 대도시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의 분리가 고착화 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토대로 도출된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 지역 포용성의 결정요인 분석

앞 절에서는 지역 포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 1)소득분배, 2)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3)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및 기회 - 에 대한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의 소득수준, 경제적 성과의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을 활용하여 각 유형별로 구성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 어떠한 경제

2) 각 유형별 분석의 경우 75개라는 광역시 내 시군구를 유형화하여 더 적은 표본수를 토대로 분석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표본수를 고려할 때 해당 결과가 지니는 통계적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생략함

적 성과 하에서 이러한 포용성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가 더욱 선명하게 관찰되는지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탐색적인 연관관계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포용성 구성요소 및 지역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탐색 및 분석방법

박인권 외(2017) 논의 등을 토대로 시군구 수준에서 아래 <표 4-13>와 같은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표 4-13 |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탐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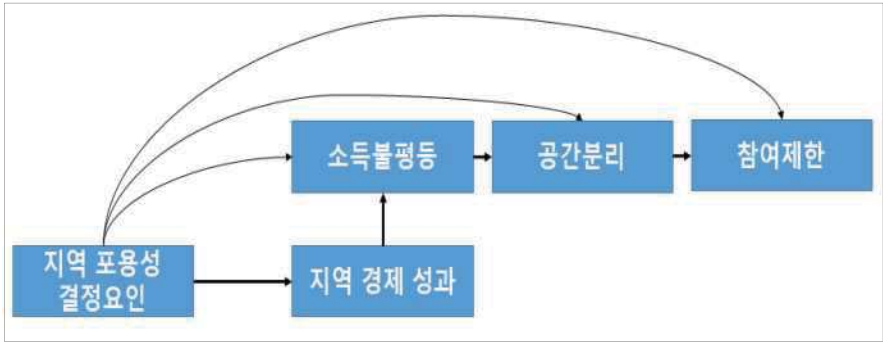
부문	구분	결정요인	활용지표
지역 요인	산업구조	산업구조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기업체 규모	업체당 고용인원
	인구구조	고령인구	65세이상 인구 비율
	고용구조	고용의 질	임시 및 일용직 비율
	기타 지역 특성	상위 권역별 특성	권역별 ³⁾ 더미
정책 요인	주거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재고 비율
	지역개발 및 지원	세종시 및 혁신도시	관련 시군 더미
		성장촉진지역	관련 시군 더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용성 구성요소의 경우 지역경제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특성들을 활용하여 포용성 결정요인을 구성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 포용성 혹은 지역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부 정책 변인들 역시 더미 변수의 형태로 결정요인 탐색 결과에 추가하였다.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제주권 이상 7개 권역 활용

탐색된 결정요인은 직접적으로 포용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앞 절에 분석된 지역경제 성과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지역경제의 성과 - 성장 및 안정 - 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소득분배 혹은 소득불균형의 영향은 앞 절의 분석에서 제시된 연관관계를 토대로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 간에 번져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경로회귀분석(Path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탐색된 결정요인들이 포용성 구성 요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경로는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분석 경로



(2)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지역의 소득증가라는 성과를 거치는 경로분석의 결과가 아래 <표 4-14>와 같다.

표 4-14 | 지역 소득증가를 매개로 하는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수	결정요인 → 소득증가	소득증가 → 소득불균형	소득불균형 → 공간분리	공간분리 → 고용률변화
상수항	11.437*	-0.053*	-0.032	4.689*
엔트로피 지수	-0.172*	0.340*	0.036	-0.057

독립변수	결정요인 → 소득증가	소득증가 → 소득불균형	소득불균형 → 공간분리	공간분리 → 고용률변화
업체당 고용인원	0.326*	0.386*	-0.104	-0.143*
고령인구 비중	0.440*	-0.257*	0.231	-0.600
임시 및 일용직 비중	0.126	0.062	-0.027	0.006
임대주택 비중	0.050	0.078	0.090	-0.058
세종 및 혁신도시	0.018	0.048	0.028	0.082
성장축진지역	-0.407*	0.320*	-0.191	-0.054
충청권	0.081	0.161*	-0.078	-0.019
호남권	-0.045	0.073	-0.112	-0.061
대경권	0.001	0.177*	0.056	-0.031
동남권	0.035	0.241*	0.036	-0.021
강원권	0.222*	-0.132*	-0.087	0.088
제주권	0.015	0.067	0.022	-0.022
소득증가		0.325*		
소득불균형			0.271*	
공간분리				-0.063
R-square	0.222	0.319	0.113	0.399

주: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계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베타 계수로 표시 하였고 *은 95%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의미

위의 분석결과를 각 종속변수별로 요약한 내용이 <표 4-15>에 제시되어 있다. 결정 요인들 중 일부는 소득증가라는 지역경제 성과와 소득불균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상관관계 분석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소득증가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균형이 공간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통제 변수의 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 | 지역 소득증가 경로분석 요약

종속변수	유의한 독립변수 (괄호안은 영향의 방향)
소득증가	엔트로피(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업체당 고용인원(+), 고령인구 비중(+), 성장축진지역 더미(-)
소득불균형	소득증가(+) , 엔트로피(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업체당 고용인원(+), 고령인구 비중(-), 성장축진지역 더미(+), 충청권 더미(+), 대경권 더미(+), 동남권 더미(+), 강원권 더미(-)
공간분리	소득불균형(+)
고용률변화	업체당 고용인원(-)

결정요인 변수들 중에서는 산업구조, 인구구조와 관련된 변수들이, 정책 변수 중에서는 낙후된 지역이 선정되는 성장축진지역 더미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 소득증가 측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불균형 자체에는 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당 고용인원은 소득증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과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모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이 많을수록 소득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장축진지역들의 경우 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증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소득불균형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 4-16>는 시군구 일지리의 연평균 증가율과 불안정성 지표를 매개로 하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소득불균형과 공간분리가 매개가 되는 경로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14>와 동일하기 때문에 각 결정요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분석결과와 해당 경제적 성과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분석결과만을 나타낸다.

표 4-16 | 지역 일자리수 성장과 불안정성을 매개로 하는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수	일자리수 성장 매개		안정성 매개	
	결정요인 → 일자리수 증가	일자리수 증가 → 소득불균형	결정요인 → 불안정성	불안정성 → 소득불균형
상수항	7.666*	-0.046*	-0.010	-0.044*
엔트로피 지수	-0.256*	0.294*	0.035	0.285*
업체당 고용인원	0.143*	0.487*	0.458*	0.510*
고령인구 비중	0.254*	-0.123	0.400*	-0.098
임시 및 일용직 비중	-0.036	0.104	0.053	0.105
임대주택 비중	0.176*	0.087	-0.105	0.090
세종 및 혁신도시	0.259*	0.043	0.149*	0.059
성장촉진지역	-0.108	0.192	0.044	0.189
충청권	0.027	0.186*	-0.192*	0.180*
호남권	-0.140	0.064	-0.059	0.056
대경권	-0.099	0.181*	-0.118	0.173*
동남권	-0.231*	0.261*	-0.117	0.248*
강원권	-0.054	-0.058	0.033	-0.059
제주권	-0.007	0.072	-0.034	0.071
일자리수 증가 혹은 불안정성		0.040		-0.039
R-square	0.2887	0.2376	0.2637	0.2375

주: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계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베타 계수로 표시 & *은 95%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의미

<표 4-17>은 위의 분석결과를 각 종속변수별로 요약한 내용이다. 일자리수 증가가 소득불균형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를 통한 결정요인의 간접적인 영향은 일단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일자리수 증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업체당 고용인원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 비중이 일자리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고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7 | 지역 일자리수 및 안정성 매개 경로분석 요약

매개변수	종속변수	유의한 독립변수 (괄호안은 영향의 방향)
일자리수 매개	일자리수 증가	엔트로피(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업체당 고용인원(+), 고령인구 비중(+), 임대주택 비중(+), 세종시 및 혁신도시 더미(+), 동남권 더미(-)
	소득불균형	엔트로피(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업체당 고용인원(+), 충청권 더미(+), 대경권 더미(+), 동남권 더미(+)
안정성 매개	불안정성	업체당 고용인원(+), 고령인구 비중(+), 세종시 및 혁신도시 더미(+), 충청권 더미(-),
	소득불균형	엔트로피(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업체당 고용인원(+), 충청권 더미(+), 대경권 더미(+), 동남권 더미(+)

대규모 고용인원을 지닌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도 일자리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소득증가 모형과 유사하게 산업구조 다양성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고용인원도 유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불안정성도 일자리수 증가와 마찬가지로 소득불균형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를 통한 결정요인의 간접적인 영향은 일단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업체당 고용인원 모두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보통 위험분산을 통해

불안정성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관찰된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우 특정한 기반 산업부문 없이 다수의 소규모 산업부문으로 다양성을 높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대내외적인 경제적 충격 하에서 쉽게 일자리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변수 역시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군의 급격한 고용인원 증가가 불안정성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 소결과 시사점

전체 시군구를 대상 연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공간분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유의한 관계도 확인되었다, 또한 공간분리 역시 기회제한을 통해 고용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관계는 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거나 소득증가 규모가 낮은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하거나 일자리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지역에서 공간분리가 고용률의 변화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특성관련 산업구조,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구조 변수들의 경우 소득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아쉬운 부분은 대다수의 결정요인들이 소득불균형을 제외한 다른 포용성 구성요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공간적 분리 등과 관련 있는 변수의 추가적 선정 및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 변수 들 중에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심

각한 소득불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대표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결과물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더미 변수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기인한 일자리수 및 불안정성 증가에는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매개한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분리와 관계에서는 소득증가, 소득불평등, 공간분리 사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을 제외하면 다른 독립변수들의 경우 공간분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업체당 고용인원과 같은 결정요인 등이 유의한 변수로 관찰되었는데, 산업구조 다양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득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 즉 소득증가를 매개로하는 소득불균형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소득불균형을 줄이는 것으로)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불균형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향의 크기는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규모의 구조적 특성을 업체당 고용인원의 경우, 소득증가와 소득불평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즉, 업체당 고용인원이 큰 대규모 위주의 사업체 위주의 구조적 특성을 지닌 지역일 수 수록 소득증가도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이를 통한 소득불평등 심화도 예상된다.



CHAPTER 5

정책적 활용 방안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 89
2. 지역 포용성 제고 정책수립을 위한 활용방안 | 93

정책적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포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및 이를 반영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과 지역 내를 동시에 고려하는 형태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융합화 등의 시사점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지역 포용성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 각 포용성 구성 요소간의 연관관계, 지역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 결과를 통해 각 지역별(시, 군, 구별) 빈곤계층의 빈곤 수준, 규모,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더하여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불평등과 공간적 분리 사이의 관계, 동시에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1) “지역 간” 균형과 “지역 내”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 공간단위의 세분화에 따라 공간 간의 격차가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시, 도나 시, 군, 구 단위에서 평균적인 소득이

나 고용규모의 격차로 지역 간, 공간 간 격차를 분석했을 때 결과들과 지역 내 세부적인 공간 단위에서 경제적 수준을 비교 했을 때 나타는 격차의 문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혹은 지역정책은 시, 도 혹은 시, 군, 구 수준의 공간단위에서의 지역 간 평균적 격차 해소나 완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세종시나 혁신도시 관련 시군구의 소득 및 고용 증가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중점을 둔 정책과 전략들의 성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지역 내 낙후 및 취약지역과 같은 지역 내 격차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표 5-1 | 2016년 시도별 일인당 소득 및 소득지니계수

시·도	일인당 소득	소득지니계수
서울	112.97	0.30369
부산	96.35	0.25187
대구	93.67	0.24644
인천	93.38	0.2388
광주	93.81	0.25115
대전	99.42	0.26489
울산	106.36	0.27522
세종	106.65	0.24392
경기	100.64	0.25987
강원	91.93	0.23315
충북	93.14	0.23496
충남	98.38	0.24847
전북	91.82	0.24258
전남	93.05	0.2419
경북	93.7	0.23404
경남	96.1	0.24401
제주	96	0.26212

주: 국가전체 일인당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시도별 상대적인 소득수준을 표시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KCB 개인소득자료를 활용

위 <표 5-1>와 같이 시, 도간 일인당 평균소득 격차 역시 현존하고 있으나 시, 도내 소득지니계수 역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울산과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나 그 내부 지역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거시경제적 여건 변화는 특정한 산업의 발달이나 대규모 개발 산업으로 인한 지역의 급격한 성장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즉, 지역 간 평균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점 거점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부문이나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같은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취해 왔던 기존 정책 기조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림 5-1>과 같이 미시적인 지역 내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토대로 각 세부 공간에 맞는 발전 및 지원전략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를 지닌 다양한 빅데이터의 구축이 수월해진 여건을 감안할 때 세부적 공간단위를 기반한 분석,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한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의 도모는 지역 포용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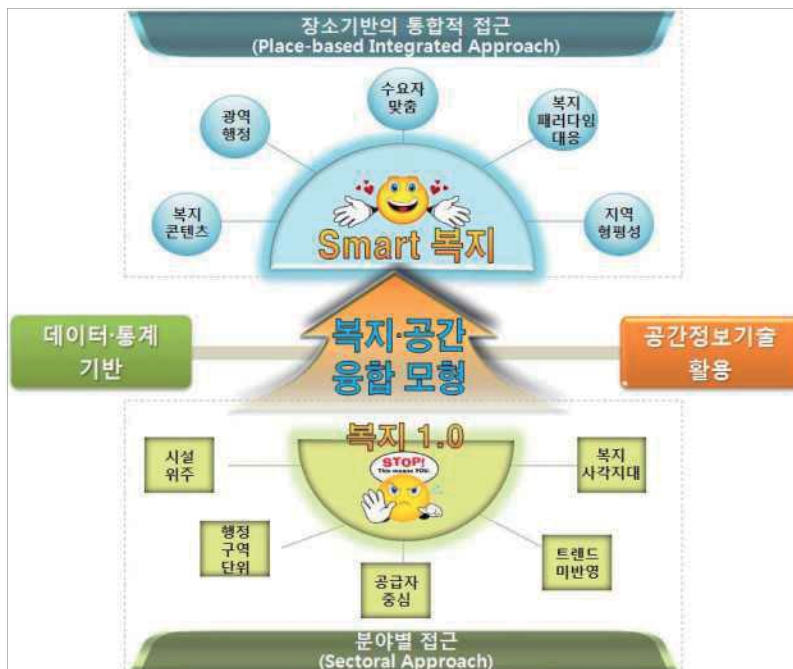
그림 5-1 | 지역 정책공간의 세분화



(2)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융합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 기존의 지역정책 혹은 공간정책들은 지역발전과 관련한 인프라 공급, 주택 및 산업시설의 건설 등 특정 거점 위주의 투자나 개발을 통한 접근이 주된 수단이었다. 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 이후에도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의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간 생활여건, 경제적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특정 시설, 거점,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등을 실시한 탓에 여전히 배제된 낙후지역이나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림 5-2 | 공간정책과 사회정책 융합



자료: 이영주 외. (2014)

한편 고령자나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감당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태로 정책을 수립, 집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동일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특성이나 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정책 수요의 공간적 분포, 그리고 각 공간 및 지역 별로 상이한 지원 수단이나 지원 정도 등은 기존 광역단위 보다 더욱 미시적인 세부적 공간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간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결합을 통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준의 지원과 도움이 제공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 포용성 제고 정책수립을 위한 활용방안

1) 지역 포용 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

(1) 다각적인 지역 소득관련 지표 제공 및 활용

기존 지역 단위 포용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지역의 소득은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본격적으로 분석되어 오지 못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규모나 수준의 비교 역시 지역 단위 총량이나 평균에 대한 비교가 주를 이루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역 포용성 측정 결과를 활용하면 단순한 평균소득의 수준을 뛰어넘어 소득분배(소득불평등)의 특성, 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까지 정량적인 지표로 지역 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약 3천 6백만원 수준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측정결과 수성구는 0.32, 성동구는 0.28로 2016년 소득지니계수 표준편차인 0.036을 넘어서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동일한 평균소득수준이라도 대구 수성구가 서울 성동구에 비해 더 심각한 불평등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 성동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지니계수 수치를 보이는 인천 연수구와 두

지역 사이의 공간분리 지수를 비교해 보면, 성동구는 0.13, 연수구는 0.05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천 연수구에 비해 서울 성동구의 저소득층이 공간적으로 더 심각한 분리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포용성 구성요소 측정결과를 활용하면 단순한 평균소득의 비교를 넘어서는 다각화 지역소득 관련 지표를 활용한 입체적인 지역소득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지역 포용성 측정과정결과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2017년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표 5-2>에 명시되어 있는 포용적인 정책 확대를 위한 지역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틀(frame)을 제공할 수 있다.

표 5-2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내용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2017.6.27.>

*4-1-3.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등을 고려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계획의 원칙과 방향 등을 포함한다”

즉, 위 지침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저소득층의 정의 및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제안한 빈곤지역(Poor Region)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빈곤지역을 정의하고 별도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시군구별 지자체 내 저소득층을 파악할 때 우리나라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인구를 저소득층 인구로 정의하고 각 시군구 내 동별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이른바 절대적 빈곤률)을 산정한다. 이를 다시 국가 전체의 저소득층 인구 비율과의 비교하고, 국가 전체 빈곤인구 비율 보다 큰 비율을 보이는 시군구 내 읍면동을 빈곤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때 분류되어 해당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계획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형태의 정책 구체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성장축진지역 지정과정에 활용도 가능하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8년 10월 수립 예정) 및 시·도 지역발전계획에서 “시·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2017년 까지 존재하지 않던 시·도 내 공간 간 격차에 관한 사항(제7조)이 추가되어 시·도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의 성격 등을 보면 지역 내 보다는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주안을 두고 지역 자체의 성장 위주의 계획 및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해 오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시·도 내 공간적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미시적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대상을 구체화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시군별 인구변화율,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마다 “성장촉진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있으며, 이 때 지정된 낙후도가 높은 약 70여개의 성장촉진지역(시, 군)은 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율 상향 혜택, 지역개발계획 및 도서종합개발계획 의한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시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정의 단위가 시군 수준이고 소득측면에서 활용되는 지표 역시 지방소득세(최근 3년 평균)이다 보니 시군 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위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정책 지원 사항과 같이 시군내 특정 읍면동 단위의 미시적 공간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지역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 소득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생활 최저기준 도입

국가 최저선 혹은 국가 최저기준 등(National Minimum)의 설정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대표적인 포용성 정책 중의 하나다. 그러나 전 국가적 최저기준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둔 나머지 지역여건에 대한 고려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역 소득에 대한 고려는 거의 부재하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해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SOC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의 지역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 <그림 5-3> 이다.¹⁾

그림 5-3 | 국가적 최저기준 선정 과정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도자료 (2018)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측정을 기반 하였지만 위의 최저기준 역시 소득과 이의 공간적 분포라는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지역 소득을 간과하고 공간별 접근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특정 생활인프라에서 동일한 물리적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접근성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역 소득의 지역 내 분포 및 공간적 분리현상을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형태로 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소득 여건이 반영된 지역 단위의 생활 최저기준이 도입 시 지역 소득을 활용한 본 연구의 포용성 진단 결과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1)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나 지역소득 측면에서 단편적인 낙후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도자료 (2018.12),
https://auri.re.kr/auriTidings/notice_view_41.asp?idx=34398&page=1&bbs_code=41&key=0&word=&etc=&opendate= (2018.12. 22일 접속)

평가에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도심 재생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물리적 공간이나 어떠한 계층이 집중하여 거주하는 공간에 이러한 정책들이 집행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시, 군 단위 내지 특정 거점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지원이나 재생의 필요성이 있는 공간과 계층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포용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격차를 감안한 지역 단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도입 및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표 5-3>은 2009년과 2016년 시도 단위의 평균소득증가와 시도내 시군구 표준편차 증가율을 보여준다.

표 5-3 | 2009년, 2016년 시도별 일인당 소득증가율 및 표준편차, 표준편차 증가율

시·도	소득증가율	2009년 표준편차	2016년 표준편차	표준편차증가율
서울	14.11719388	3687.002	5399.135	46.43699678
부산	12.81509542	2152.404	2741.716	27.37924665
대구	10.99419104	2361.668	2649.719	12.19693031
인천	11.37680842	3341.093	2601.8	-22.12727991
광주	12.31714118	1359.896	1274.995	-6.243198009
대전	12.7997531	2666.306	3725.089	39.70973324
울산	14.893187	1538.629	1694.91	10.15715939
경기	12.72385733	2674.08	2988.839	11.77073984
강원	12.28953367	1297.955	850.7852	-34.45187237
충북	13.38025022	1213.995	1470.151	21.10025165
충남	17.98013705	1055.377	2026.624	92.02844102
전북	11.87201548	1099.295	1521.745	38.42917506
전남	12.15239865	1508.917	1670.195	10.68832812
경북	12.38368044	1866.391	2504.186	34.17263585
경남	13.53103821	1801.872	2319.843	28.74627055
제주	15.18548593	1642.758	2523.08	53.58805131
평균	13.17573544	1954.227375	2372.675763	22.72385059

주: 세종은 자료 부재로 생략함

16개 시, 도 중 충남의 평균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동시에 표준편차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이는 증가된 소득이 특정 시군구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16개 시도 중 평균소득증가율과 표준편차증가율이 전국대비 두 번째로 높은 제주도 또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기간 중 16개 시도 가운데 소득증가율이 두번째로 낮고, 동시에 표준편차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한 인천의 경우, 전국 대비 소득의 증가가 크지 않았고, 증가된 소득 역시 지역 내에서 과거에 비해 편중되는 정도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구의 경우, 16개 시도 가운데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표준편차 증가율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의 소득증가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 내에서 편중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분배의 편중은 조금씩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그 성장의 과실이 내부 군구에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심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증가율을 보인 시도에서 시군간의 불균등한 소득 배분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본 연구의 시군구 내 동별 단위의 격차 문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여전히 시도 간 평균적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하여 32개의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5.4조원 규모로 도입된 이래 2017년에는 약 9.8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포괄보조사업이라는 사업 기반 지원제도이기는 하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광역자체단체(도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도나 광역시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의 이슈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원이 광역자치단체 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업에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위 시도 내 시군구간 소득격차 문제 인식과 같이 시도에 대한 지원이 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혹은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회계와 더불어 지역 내 자체적인 균형발전 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간구해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각 광역자치단체(시도) 별로 자체적인 지역 내 균형발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미 지역 단위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체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도 등 도 단위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조례를 통해 지자체 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지역 내 발전수준, 성장정도와 특성을 고려,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예산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일부와 도보통세를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청남도의 경우 도 내 전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7년 3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계획을 기반으로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하여,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도 배정액(지역특별회계 당시, 시도자율계정)의 10%,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8개 시군을 지원하였다(한상욱 외, 2017). 즉,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회계의 일부분과 도 징수액의 재원을 활용하고, 자체 조직(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도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하지만,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이 희석화되어 시·군 장기적인 균형발전보다는 현안 문제해결에 당장 필요한 쌈지돈이라는 인식의 문제 및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의문 및 선정지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적(충청남도, 2016)되었다.

따라서 좀 더 정밀한 지역 내 균형발전 현황분석과 이를 위한 지표마련, 또한 증거기반의 지원 대상지역 선정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시도 내 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 내 균형발전특별 회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중앙정부 예산에 자체 예산을 더하여 차등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시군구로부터 얻어지는 세입을 빈곤한 시군구로 분배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광역자치단체 내 균형발전특별 회계 확대 운영이 요구된다.

(2) 지역소득 증대를 통한 포용성 제고

위에 제시된 정책수단들이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집행의 주체로 보고 도출된 것이라면,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인 소득, 특히 지역 주민 모두의 소득 증대를 통한 포용성 도모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기업 위주의 특정산업 발전은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소득향상과 연결되기보다 오히려 지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혁신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해당 지역에서 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로 이어지기보다 역외(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이제 대다수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즉 지역 경제적 발전이나 성장의 혜택들이 지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특별히,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 단위 사업의 과실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착근하여 선순환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대표적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모형으로 협동조합 등을 위시로 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일본의 시민뱅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현재 지역 혹은 마을 단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중간지원 과정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재정적 지원 역할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4 | 일본의 시민뱅크 제도

- 시민뱅크제이란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취미, 유통 등 생활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여성이나 환경보호, 유기농업 등 사회적 의의가 있는 사업을 지향하는 미민과 단체에게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
- 1989년 4월 동경도에 있는 永代 신용조합과 시민사업의 연구, 그리고 경영컨설팅업체인 (주) 프레스 올터너티브사가 제휴해서 설립한 것으로서 용자 뿐만 아니라 상당, 정보, 노하우 공유, 구인, 구직 교류사업 등을 통해 사업 상호간의 자립과 협력체계를 구축

자료: 이준호 외 (2014, p. 87)

실험이나 마을금고와 같은 현존하는 지역 단위 금융기관과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간의 결합을 통해 금융적 지원과 사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산이나 유희 및 낙후의 공유자산화 및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형태의 지역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인구의 노동 참여 활성화 같은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수급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가능하다.

표 5-5 | 주민주도 지역 고유 자산 사업 사례

〈전북 송죽마을 사례〉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인 모시재배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연간 1.65억원의 매출액을내고 순이익금을 마을기금을 적립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연금을 지급

〈제주 가시리 마을 사례〉

제주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에 2012년부터 풍력발전단지 사용허가 수익으로 연간 9억원을 창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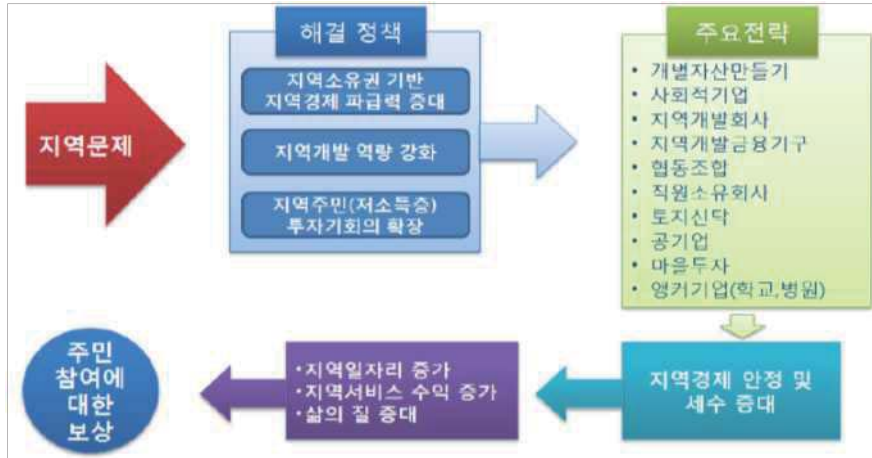
현재 마을 전 가구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부담,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며

연간 3억원의 마을기금을 적립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 관광자원 확충, 마을만들기 등에 활용

자료: 홍사흠 외 (2016, p. 165-166)

이에 더하여 도시재생과 같이 구도심 혹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수행 시 사업 수행 과정에 주민참여 등을 활성화하는 형태의 지역자산화 조직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지역 소득분배 및 주민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4 |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자료: Dubb (2014), p. 7. 최명식(2017), p. 127 역주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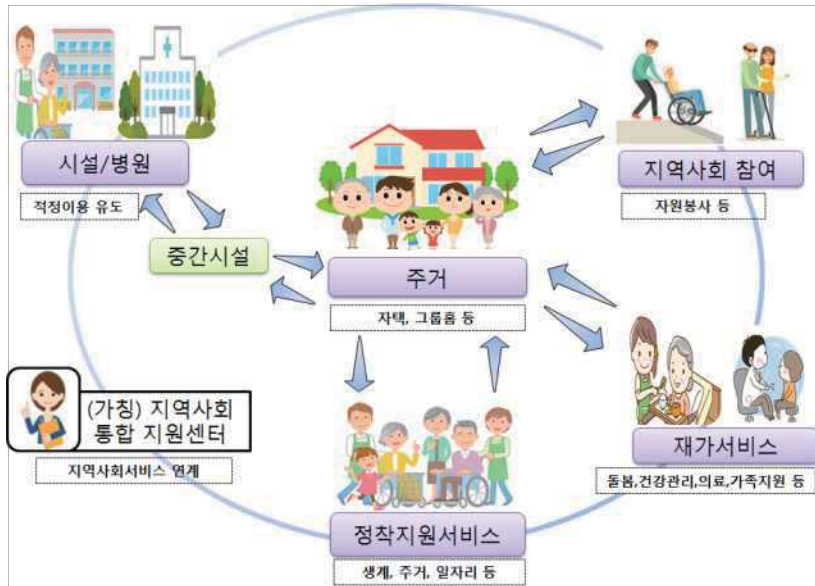
(3)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적 집행은 그 대상의 중요성만큼이나 위치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책적 시사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과 공간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수립, 집행되어야 지역의 포용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거나 관련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할 때 이의 대상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가 공간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비도시지역의 고령인구를 위한 복합적인 의료시설이나 의료단지를 구축한다고 할 때 어디에 비도시지역의 고령인구가 집중하여 분포하는 가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고령인구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위치에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노력이다. 동시에 높은 접근성을 지닌 지역에 복지시설이 입지하는 만큼 관련한 시설 역시 복합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등의 정책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통합적인 복지정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5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3.12.)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사례 들은 다양한 사회정책 중에서 복지, 특히 고령인구를 감안한 복합화된 의료시설을 위시로 한 정책이 주된 내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적 포용거점의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업으로 인한 빈곤계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콘텐츠의 기능이 복합된 형태의 공간 포용거점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 107
2. 한계와 향후과제 | 109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측정 및 분석 결과, 시사점, 제안된 정책방향과 수단들을 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방법, 자료, 결과해석과 적용상의 한계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 및 과제도 제안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포용성장이라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즉, 연구의 분석 단위인 시, 군, 구라는 공간에서 이른바 기존의 거점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 중심의 발전이 인접한 지역을 비롯한 전국토적 발전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배경과 가정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구득이 가능해진 읍, 면, 동 수준의 공간적 정보를 지닌 개인소득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득성장, 소득분배, 공간적 분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소득 성장에 수준에 따라 지역에서 소득분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소득분배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인 분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실증적으로 관찰했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설명하면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소득의 높은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득불평등도의 심화 역시 공간적 분리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지역

포용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역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역 산업의 규모, 고령인구 비중 등의 요인들이 소득 성장을 매개로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수들 중에서는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더미 변수와 같은 균형발전정책 관련 변수들은 일자리수와 불안정성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증가나 불평등도 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측정 및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포용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안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 간” 균형과 “지역 내”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평균적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이의 완화에 비중을 두고 수립, 집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의 평균적 성장이 지역 내 모든 주민이나 공간의 성장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역시 비중을 두고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시사점은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융합되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 수요와 대상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을 간과한 채 수립되는 집행되는 사회(복지) 정책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적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융합하여 실효성 높은 포용성 제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 전환을 토대로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1)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2) 지역 소득 증대를 통한 포용성 제고, 3)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의 정책 방안을 유형화 했다. 이를 토대로, 광역시, 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장소기반, 주민주도형 지역자산화 및 공유화 방안,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등의 정책 사례를 제안, 소개 하였다.

2.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포용성장이라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 지역 소득이라는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공간단위에서 개인소득 자료를 활용한다는 차별성만큼이나 광범위한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지나치게 소득 분배라는 문제로 압축시켜 제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즉, 미시적 공간단위에서 포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나 통계 등과 연계하여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 졌다면 한 차원 광범위한 수준에서 지역 포용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 범위의 한계는 포용성 결정요인의 실증 분석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소득분배 중심의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포용성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포용성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기존의 지역경제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었던 것들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각각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모형 전체의 설명력 역시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아직은 지역 단위에서 실증적인 포용성 관련 이론이나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 가능하나 다양한 관련 이론과 변수에 대한 시도 역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활용된 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공간수준까지 저소득층 집적 지역을 선별하

고, 해당 지역의 각종 생활SOC 및 삶의 질 관련 시설들의 수준을 점검한다면 실효성 높은 지역 지원, 포용성 제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시군구 단위 수준의 지역 지원 제도 하에서 소외되어 왔던 정책 사각 지대 발굴에 본 연구의 소득관련 측정 결과와 공간적 분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군구 단위를 넘어서 커뮤니티 기반의 맞춤형 지역 지원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 연구 역시 요구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도자료. 2018. 12.

https://auri.re.kr/auriTidings/notice_view_41.asp?idx=34398&page=1&bb_s_code=41&key=0&word=&etc=&opendate= (2018. 12. 22일 접속)

김동현, 임엽. 2010. 인적자본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 지역연구, 26(2), 41-53.

김미곤. 2014. 빈곤·불평등 추이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215, 6-16.

김수진. 2015.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김정훈, 윤성주, 김현아, 김문정. 2017,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 재정분권과 저출산/일자리/교육 정책의 정합성 제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18.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2017. 6. 27.)

문정호, 이순자, 김진범, 민성희, 김수진, 박경현. 2016.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51, 95-139.

박인권. 2016.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World & Cities, 12 : 6-13.

박인권, 이민주, 홍철, 임인선. 2017. 한국 도시의 포용성 진단과 유형별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3.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

안흥기, 홍사흠, 남기찬, 이미영, 하수정. 2016. 지역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윤성주. 2014.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2-34.

-
- 이영주, 임은선, 2014. 복지와 공간의 융합을 통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No. 461. 안양: 국토연구원
- 이준호 외, 2014. 지역경제활성화지원법률 제정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임춘성, 2017. 4차산업혁명 본질은 초연결. 매일경제.
<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115&year=2017&no=141090>
(2018. 1. 5. 접속)
- 장용석, 이명진, 신태영, 김승현, 성지은, 김성아. 2016 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조권중, 2017. 포용도시 서울 : 성과와 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시행)
- 충청남도, 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최명식, 이형찬, 전은호, 이원동. 2016.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토지자산 공유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최명식, 홍사흠, 전은호, 2017. 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최병두, 2017.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52(6), 661-682.
- 한상욱, 임형빈, 2017. 제3기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사군 선정(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 Issue Report. 충남 : 충남연구원.
- 홍사흠, 2015.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 홍사흠, 안흥기, 하수정, 남기찬, 김은란, 2016.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Alexander, 2015. Inclusive Growth : Topic Guide, GS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
- Ali and Hwa Son, 2007. “Measuring inclusive growth”, *Asian Development Review*, 24(1) :11–31.
- Anand, R. , Mishra, M. S. , & Peiris, S. J. 2013. Inclusive growth: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No. 13–13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1. Inclusive Cities. Steinberg, F. & Lindfield, M. (Eds.). Urban Development Series. Manila : Asian Development Bank.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7. Enabling Inclusive Cities : Tool Kit for Inclusive Urban Development.
- Barnes, M. 2005. Social Exclusion in Great Brita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with the EU. Aldershot: Ashgate.
- Benabou, R. 2000. Unequal societie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social contract.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96–129.
- Brookings Institute. 2016. Metromonitor 2016: Tracking growth, prosperity, and inclusion in the 100 largest U.S. metropolitan areas.
- Burchardt, T. , Le Grand, J. , &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3(3), 227–244.
- Byrne, D. 1999. 1999: Social exclus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ommission on Growth. 2008. The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World Bank Publications.
- Davas and Wolff, 2016. An Anatomy of Inclusive Growth in Europe. Bruegel Blueprint series 26.
- Dubb, Steve, 2014. Innovations in Community Wealth Policy. Presentation at the Rocky Mountain Employee Ownership Center. Denver: Co.
- Estivill, J. 2003. Concepts and strategies for combating social exclusion: an overview.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 Gaspar, J. M., & Massa, M. 2006.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product market competition. *The Journal of Business*, 79(6), 3125–3152.
- Jenkins, S. P., Brandolini, A., Micklewright, J., & Nolan, B. (Eds.). 2012. *The great recession and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OUP Oxford.
- Juliano, D. 2001. Género y exclusión. In Valencia, A. (ed) *Exclusión social y construcción de lo público en Colombia*. Bogotá: 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Colombiana (CEREC),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Universidad del Valle: 27–50.
- Kabeer, 2006. Social exclusion and the MDGs: the challenge of ‘durable inequalities’ in the Asian context, Asia 2015 Conference, London, 6–7 March.
- Kort, J. R. 1981. Regional economic instability and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e US. *Land Economics*, 57(4), 596–608.
- IMF. 2013.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Old Risks, New Challenges*
- Landman, T. 2006. Human rights and social exclusion indicators: concepts, best practices, and methods for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Essex: Department of Government Human Rights Centre.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 Madanipour, A., Cars, G., & Allen, J. 1998.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Cities: Processes, Experiences and Responses*, Jessica Kingsley: London.
- Massey, D. S., & Denton, N. A.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 Mathieson, J., Popay, J., Enoch, E., Escorel, S., Hernandez, M., Johnston, H., & Rispel, L. 2008.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ies. A review of literature.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Background Paper, 1, 91.
- Meltzer, A. H., & Richard, S. F.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 OECD. 2014. Report on the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Paris : OECD.
- OECD. 2018, Divided Cities: Understanding Intra-urban Inequali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0385-en>.
- Ostry, J., & Berg, A.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 Two Sides of the Same coin? , IMF Staff Discussion Note.
- Ostry, M. J. D., Berg, M. A., & Tsangarides, M. C. G.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 Saint-Paul, G., & Verdier, T. 1993. Education, democrac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2(2), 399–407.
- Saint Paul, G., & Verdier, T. 1997. Power, distributive conflicts, and multiple growth paths. *Journal of Economic Growth*, 2(2), 155–168.
- UN/DESA, 2009,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 UN/DESA, 2016, Leaving no one behind.
- UN Habitat, 2000, UNCHS(Habitat) : the global campaign for good urban governance
- UN Habitat, 2004, Urban Governance Index: Conceptual Foundation and Field Test Report.

-
- UNDP, 2017, UNDP's Strategy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 UNESCO, 2005, Guidelines for inclusion.
- Valencia, A 2001. Exclusión social y construcción de lo público en Colombia. In Valencia, A. (ed.) Exclusión social y construcción de lo público en Colombia. Bogotá: 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Colombiana (CEREC),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Universidad del Valle: 11–25.
- WEF, 2015,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5.
- WEF, 2017. The Global Risk Report 2017.
- Weide and Milanovic, 2014, Inequality Is Bad for Growth of the Poor (But Not for That of the Rich)? , World Bank
- WHO,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 World Bank. 1990.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08.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Commission on Growth. Washington DC : World Bank.
- World Bank. 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Washington DC : World Bank.
- World Bank, 2013, Inclusion Matters : The Foundation for Shared Prosperity.
- World Bank. 2015.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GSURR. Washington DC : World Bank.
- World Economic Forum(WEF). 2017. The Global Risk Report 2017. Cologny : World Economic Forum, 41.

부록 1. 측정결과 표

부표1 | 2009년, 2016년 시도, 시 군별 소득, 지니계수, 비유사성지수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서울	종로구	32600.51	37164.41	0.28708	0.31043	0.1367	0.1436
	중구	30294.4	36486.79	0.27091	0.30336	0.0277	0.081
	용산구	38264.17	49848.69	0.34238	0.42385	0.1113	0.1667
	성동구	30939.15	36202.69	0.26518	0.28055	0.0461	0.1257
	광진구	35375.76	40461.41	0.29097	0.31979	0.0994	0.1477
	동대문구	28931.95	32887.2	0.23935	0.25269	0.0483	0.079
	종량구	27663.99	30597.5	0.23031	0.23591	0.0397	0.0893
	성북구	30448.91	34479.27	0.25108	0.26546	0.072	0.072
	강북구	27892.7	30999.82	0.23281	0.24655	0.0525	0.081
	도봉구	28927.98	31231.33	0.24269	0.24809	0.0323	0.0705
	노원구	28412.97	30961.57	0.24223	0.25165	0.0546	0.1298
	은평구	30845.43	35083.24	0.25621	0.27142	0.0413	0.075
	서대문구	31264.67	34959.39	0.26292	0.27712	0.0682	0.0878
	마포구	32504.53	38509.12	0.27753	0.3078	0.0592	0.0668
	양천구	34981.31	38475.88	0.29566	0.32665	0.081	0.0902
	강서구	29608.98	33388.44	0.26238	0.27595	0.0793	0.1134
	구로구	28893.08	32568.32	0.23431	0.24218	0.0631	0.0569
	금천구	27466.62	30942.77	0.22968	0.23445	0.0575	0.1336
	영등포구	32399.33	37495.61	0.27588	0.29228	0.0788	0.0701
	동작구	32594.48	38329.75	0.27328	0.30285	0.0485	0.1299
	관악구	29209.27	32718.27	0.246	0.25402	0.0621	0.0853
	서초구	40168.51	49259.25	0.33054	0.39355	0.0624	0.1485
	강남구	39941.95	46018.08	0.34579	0.3941	0.1273	0.1337
	송파구	36064.35	41044.04	0.29994	0.32762	0.0727	0.1061
	강동구	31588.63	34573.56	0.26567	0.27848	0.0788	0.0862
부산	중구	24583.67	27064.37	0.18272	0.20429	0.0617	0.0514
	서구	28883.11	32330.4	0.25382	0.26628	0.0828	0.1217
	동구	26896.58	30583.22	0.21319	0.23848	0.0661	0.2492
	영도구	25026.3	27365.06	0.19646	0.20696	0.0555	0.079
	부산진구	27350.55	30615.27	0.22041	0.23685	0.053	0.1146
	동래구	29681.66	33227.34	0.23822	0.27033	0.096	0.071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남구	28704.67	33666.64	0.23584	0.27649	0.044	0.1148
	북구	26239.5	29321.66	0.21113	0.23275	0.0625	0.0599
	해운대구	30726.13	34155.59	0.26686	0.29326	0.0677	0.0598
	사하구	26137.42	28935.84	0.20591	0.21978	0.0651	0.0818
	금정구	30886.75	34245.4	0.25622	0.28573	0.0877	0.107
	강서구	26893.32	35335.25	0.22687	0.25182	0.0993	0.1348
	연제구	29382.19	33565.28	0.23409	0.27307	0.038	0.0833
	수영구	30139.97	33594.82	0.25139	0.27031	0.0397	0.1058
	사상구	24922.74	27446.75	0.19013	0.20074	0.0419	0.0634
	기장군	25559.44	30807.25	0.20579	0.2321	0.1082	0.1544
대구	중구	27412.73	30533.76	0.2242	0.2313	0.0605	0.2114
	동구	26232.3	29386.42	0.20367	0.22395	0.0643	0.1071
	서구	24785.96	27523.78	0.18553	0.1982	0.0464	0.089
	남구	27832.95	30773.36	0.22983	0.25184	0.0739	0.1363
	북구	26176.65	29002.3	0.19761	0.21949	0.0952	0.0852
	수성구	32331.23	36192.03	0.27014	0.3223	0.0755	0.1289
	달서구	27061.65	29517.21	0.2099	0.23175	0.0785	0.0708
	달성군	25079.74	28443.79	0.18644	0.20737	0.049	0.0601
인천	중구	27469.29	31944.63	0.23104	0.2444	0.0532	0.0748
	동구	24721.71	27671.43	0.1858	0.20045	0.0753	0.0663
	남구	26208.52	29021.89	0.21088	0.22041	0.0346	0.1009
	연수구	30197.88	33627.96	0.2627	0.28402	0.0664	0.0495
	남동구	26738.78	30035.48	0.21994	0.23322	0.0376	0.0673
	부평구	27144.74	29967.82	0.22307	0.2349	0.056	0.0645
	계양구	26042.05	28624.32	0.21185	0.21879	0.0353	0.0592
	서구	27709.6	31164.93	0.22949	0.24545	0.0963	0.069
	강화군	28554.26	29852.63	0.20969	0.22021	0.0709	0.0716
	옹진군	17733.33	24000	0.16416	0.15194	0	0
광주	동구	29483.61	32671.41	0.25516	0.2738	0.095	0.0821
	서구	28508.77	31832.01	0.24709	0.27364	0.0566	0.0642
	남구	28636.77	31834.38	0.25126	0.27452	0.0415	0.0679
	북구	26647.8	29471.02	0.22787	0.24056	0.0609	0.0933
	광산구	26347.22	30451.86	0.21381	0.24245	0.0928	0.0683
대전	동구	25187.16	28121.89	0.20083	0.21652	0.068	0.0739
	중구	27503.38	30986.36	0.2237	0.25012	0.0696	0.0821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서구	29097.07	32298.73	0.2428	0.26639	0.0716	0.1005
	유성구	31953.4	37580.72	0.27136	0.29887	0.1074	0.0875
	대덕구	26143.18	28997.28	0.21192	0.2299	0.0622	0.1199
울산	중구	31530.31	36334.57	0.26758	0.29304	0.0829	0.0951
	남구	31919.85	36186.07	0.27059	0.29525	0.0511	0.1399
	동구	29027.36	33758.43	0.25403	0.25861	0.0513	0.1633
	북구	29727.31	34446.13	0.25378	0.27571	0.0949	0.0591
	울주군	28419.09	32312.01	0.23401	0.25004	0.0453	0.0626
세종	세종시	28854.62	35343.07	0.22897	0.25197	0.1	0.155
경기도	장안구	30082.04	33798.71	0.24034	0.26775	0.045	0.0813
	권선구	27796.29	31487.82	0.22709	0.24487	0.051	0.0572
	팔달구	28742.38	32647.31	0.24175	0.25805	0.0366	0.1095
	영통구	31596.51	37536.41	0.26032	0.29912	0.045	0.072
	수정구	29626.35	31836.62	0.25061	0.24624	0.06	0.0821
	중원구	26753.68	30275.1	0.22067	0.23126	0.0669	0.078
	분당구	35408.06	40368.13	0.29807	0.33192	0.0634	0.0896
	의정부시	26393.1	28986.32	0.20824	0.22118	0.0422	0.0863
	만안구	28450.26	31354.9	0.23181	0.23968	0.0278	0.0836
	동안구	31211.3	34585.9	0.2581	0.27705	0.0798	0.1009
	부천시	28186.89	31308.26	0.23563	0.24873	0.0532	0.0723
	광명시	28301.09	32359.4	0.23349	0.25007	0.0575	0.0741
	평택시	27255.89	31293.18	0.21998	0.24352	0.0737	0.0619
	동두천시	24241.1	27082.44	0.18673	0.20029	0.0274	0.0483
	상록구	27819.11	30578.05	0.22477	0.24296	0.0535	0.0746
	단원구	26978.21	29825.54	0.21298	0.23202	0.0576	0.0416
	덕양구	28915.91	32070.25	0.24001	0.25293	0.0477	0.0601
	일산동구	32345.69	36013.48	0.28067	0.31303	0.0533	0.0771
	일산서구	31101.54	34011.41	0.2621	0.27869	0.0674	0.0607
	과천시	36199.93	39133.44	0.28791	0.31596	0.072	0.079
	구리시	29005.39	32302.78	0.22923	0.25295	0.0424	0.0511
	남양주시	27578.35	30539.95	0.22424	0.24046	0.0647	0.0579
	오산시	26589.11	31067.26	0.2106	0.23114	0.0236	0.073
	시흥시	25998.2	28846.19	0.19939	0.21837	0.0702	0.07
	군포시	29079.43	32667.18	0.24185	0.25671	0.0461	0.0601
	의왕시	29715.49	33361.26	0.24475	0.26472	0.0213	0.0892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하남시	29225.98	31057.37	0.23516	0.23781	0.0982	0.0268
	처인구	26753.72	30034.94	0.20698	0.22311	0.0916	0.0635
	기흥구	31011	35052	0.25142	0.27534	0.077	0.0526
	수지구	33984.59	38329.18	0.2703	0.29874	0.0549	0.0606
	파주시	27243.91	30694.37	0.22536	0.23855	0.0715	0.061
	이천시	27235.59	32782.62	0.21723	0.24944	0.0984	0.1543
	안성시	25980.06	29920.96	0.20244	0.22049	0.0793	0.0855
	김포시	28057.41	31871.3	0.23261	0.25096	0.0782	0.1115
	화성시	28845.32	34591.74	0.23324	0.26552	0.0868	0.0646
	광주시	28083.45	31041.42	0.21702	0.23057	0.0462	0.0422
	양주시	25286.17	27999.01	0.1949	0.20783	0.1198	0.0781
	포천시	24773.21	27422.1	0.19132	0.20664	0.0535	0.0563
	여주시	26008.89	30049.99	0.20519	0.22167	0.0347	0.0369
	연천군	24963.79	28958.89	0.21178	0.21474	0.0525	0.0629
	가평군	26169.45	29651.88	0.21133	0.2259	0.2323	0.0478
	양평군	29914.18	32623.32	0.24291	0.23804	0.1322	0.1149
강원도	춘천시	27464.66	30522.73	0.22844	0.24244	0.0645	0.0655
	원주시	26639.9	29965.67	0.22161	0.24136	0.0756	0.066
	강릉시	27308.73	30248.42	0.22236	0.24208	0.079	0.0933
	동해시	26335.6	29881.02	0.20892	0.22871	0.0713	0.0843
	태백시	27024.33	30684.98	0.21884	0.24301	0.0922	0.1843
	속초시	25768.63	28145.88	0.20859	0.21874	0.05	0.0369
	삼척시	25888.57	29607.59	0.20516	0.22704	0.0467	0.093
	홍천군	25079.98	29365.49	0.19804	0.21601	0.1249	0.0367
	횡성군	25678.3	28614.46	0.19407	0.21035	0.0393	0.0081
	영월군	27242.23	29637.94	0.21247	0.22735	0.0056	0.0026
	평창군	24747.21	27459.53	0.19246	0.20154	0.2134	0.0682
	정선군	25255.37	30349.88	0.21047	0.238	0.1703	0.1751
	철원군	25884.33	30205.78	0.20198	0.22552	0.1976	0.0934
	화천군	23497.77	29789.24	0.19964	0.19265	0.1067	0.0691
	양구군	23521.7	29815.59	0.2065	0.2107	0.2493	0.179
	인제군	23230.23	30140.58	0.20139	0.19643	0.1695	0.2889
	고성군	25111.93	28901.18	0.19149	0.20957	0.004	0.1317
	양양군	25605.73	29239.13	0.20145	0.19985	0.1854	0.1649
충청북도	충주시	26100.5	29176.9	0.20947	0.23031	0.0491	0.0508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제천시	26132.5	29267.43	0.21309	0.23307	0.0465	0.0738
	상당구	27265.32	30398.1	0.21621	0.23958	0.0665	0.0613
	서원구	27871	31169.63	0.23005	0.24687	0.0637	0.0651
	흥덕구	28049.19	32083.55	0.23603	0.25695	0.1067	0.1159
	청원구	26386.47	31062.88	0.21506	0.2348	0.0917	0.0525
	보은군	24351.5	26940.78	0.19276	0.20438	0.0455	0.032
	옥천군	25112.85	27610.7	0.18179	0.19828	0	0
	영동군	25784.3	29052.57	0.19524	0.21733	0.0187	0.0198
	증평군	24827.45	28714.46	0.19403	0.2101	0	0
	진천군	24655.07	28961.08	0.18455	0.20219	0.0455	0.1312
	괴산군	25296.69	28781.97	0.18497	0.20316	0	0
	음성군	24493.02	28527.97	0.18173	0.20406	0.0629	0.1027
	단양군	25217.77	27636.08	0.18775	0.20626	0.1177	0.1733
충청남도	동남구	26856.93	30555.3	0.21893	0.23804	0.0706	0.0692
	서북구	27714.37	32758.65	0.23079	0.26307	0.0852	0.0435
	공주시	26591.23	29197.5	0.21095	0.22742	0.0498	0.0476
	보령시	26766.24	30177.73	0.21611	0.24225	0.0535	0.0441
	아산시	26893.48	33347.59	0.22105	0.25762	0.0498	0.141
	서산시	28532.12	34291.16	0.24198	0.27423	0.0927	0.1374
	논산시	25787.63	28634.76	0.20085	0.21582	0.0526	0.0186
	계룡시	29134.56	32008.04	0.22726	0.24651	0.0763	0.0462
	당진시	27102.8	34273.69	0.22838	0.25496	0.0837	0.1044
	금산군	25118.45	28836.07	0.18384	0.21327	0.0164	0.0784
	부여군	26706.37	29503.14	0.20798	0.23282	0.0343	0.0723
	서천군	27443.18	30770.25	0.2113	0.24345	0.0353	0.0866
	청양군	25408.25	27872.79	0.18943	0.20862	0	0
	홍성군	27372.2	32247.92	0.21301	0.24461	0.0342	0.1106
	예산군	27437.38	30108.33	0.21271	0.2329	0.0442	0.0053
	태안군	26025.38	29655.4	0.21395	0.22601	0.1224	0.0431
전라북도	완산구	27965.58	30953.16	0.23732	0.26427	0.0579	0.0552
	덕진구	27712.05	31025.26	0.22682	0.25245	0.0418	0.0673
	군산시	26653.71	30294.47	0.22152	0.24476	0.0527	0.0531
	익산시	25863.85	28568.63	0.2129	0.22944	0.0456	0.0951
	정읍시	25412.4	28323.98	0.19494	0.21922	0.0333	0.0579
	남원시	26191.2	28552.43	0.20232	0.2255	0.0554	0.0649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김제시	24244.96	26441.63	0.18671	0.20468	0.0626	0.1189
	완주군	25296.38	31136.28	0.20648	0.2341	0.0647	0.0858
	진안군	25396.48	28195.17	0.17784	0.20205	0	0
	무주군	25474.28	30579.12	0.18711	0.21322	0.0123	0.0406
	장수군	24277.67	27811.97	0.17081	0.19708	0	0
	임실군	24328.18	27581.02	0.17084	0.18148	0.0448	0.3221
	순창군	25529.27	28351.59	0.18081	0.20431	0.0027	0.0633
	고창군	25375.29	28359	0.19527	0.22092	0	0
	부안군	25819.05	27081.47	0.19586	0.21028	0.0028	0.0228
전라남도	목포시	26143.37	28953.85	0.21817	0.23024	0.0569	0.0646
	여수시	27341.65	30746.2	0.23921	0.25368	0.0673	0.0891
	순천시	27653.16	30762.38	0.23024	0.24867	0.0514	0.0779
	나주시	25418.76	28995.56	0.21377	0.22564	0.0628	0.1151
	광양시	28385.84	31871.26	0.24778	0.25697	0.0507	0.0638
	담양군	25017.29	27705.59	0.1809	0.20846	0	0
	곡성군	30223.24	26237.29	0.20371	0.17435	0.6045	0
	구례군	27042.38	30686.57	0.19939	0.21239	0	0
	고흥군	24444.86	28168.83	0.18922	0.21263	0.0739	0.0783
	보성군	25232.02	28470.02	0.19294	0.2129	0.0786	0.1469
	화순군	24285.33	26882.42	0.18486	0.20766	0.0024	0
	장흥군	27330.02	31067.06	0.2126	0.24205	0.0102	0.088
	강진군	27877.31	30919.38	0.22666	0.24647	0.0101	0.2335
	해남군	26380.85	29496.81	0.19874	0.23435	0	0
	영암군	26334.2	31306.08	0.21898	0.23418	0.0295	0.0182
	무안군	27117.23	32083.85	0.2165	0.23633	0.0601	0.0672
	함평군	27646.83	29570.85	0.20358	0.22224	0	0
	영광군	27862.73	30910.57	0.25239	0.25008	0.2024	0.0591
	장성군	24170.74	29440.99	0.18782	0.21667	0.1937	0.1294
	완도군	26700.67	30098.77	0.21013	0.22429	0	0
	진도군	27140.85	27271.74	0.19587	0.18606	0	0
경상북도	신안군						
	남구	30459.2	34398.28	0.26069	0.27706	0.0766	0.1117
	북구	29036.68	32005.52	0.23349	0.25062	0.0448	0.0791
	경주시	27429.82	30361.96	0.21955	0.23916	0.0764	0.1082
	김천시	27123.62	29831.83	0.21575	0.23341	0.0322	0.042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안동시	26898.9	29829.08	0.21317	0.23809	0.0701	0.097
	구미시	27034.21	31515.89	0.20874	0.2357	0.0792	0.0795
	영주시	27622.99	30575.05	0.21904	0.247	0.0752	0.074
	영천시	24396.74	26863.91	0.18466	0.19858	0.0639	0.1005
	상주시	26568.36	29109.18	0.20399	0.22905	0.0803	0.116
	문경시	27263.34	29856.43	0.20963	0.23453	0.0285	0.0382
	경산시	25245.56	27759.32	0.1937	0.20254	0.0579	0.0979
	군위군	22551.33	26076.92	0.1547	0.14919	0	0
	의성군	25413.84	29369.98	0.19182	0.24006	0.0034	0.0594
	청송군	24983.02	29717.13	0.19323	0.20723	0.1633	0.2699
	영양군	24718.54	33371.43	0.19358	0.23574	0	0
	영덕군	26986.35	30299.04	0.21387	0.22444	0.1264	0.2476
	청도군	23768.67	25284.34	0.17422	0.17122	0.1019	0.1613
	고령군	23376.54	26193.52	0.16269	0.18325	0.0236	0.0628
	성주군	26470.69	28733.91	0.18133	0.21821	0	0
	칠곡군	24730.23	29750.54	0.18433	0.20998	0.0965	0.2151
	예천군	26555.92	28738.69	0.20089	0.2192	0.0762	0
	봉화군	25774.96	29316.3	0.19093	0.20791	0.0333	0.0612
	울진군	28390.04	35449.12	0.26317	0.27552	0.2987	0.3455
	울릉군						
경상남도	진주시	28606.36	31925.26	0.23037	0.257	0.0678	0.0774
	통영시	26255.23	30474.22	0.20579	0.2355	0.1282	0.1618
	사천시	26003.41	31399.39	0.2092	0.2361	0.0815	0.0679
	김해시	26891.26	30605.72	0.21008	0.2373	0.1384	0.0824
	밀양시	26555.55	28804.69	0.20563	0.22411	0.0411	0.1076
	거제시	29595.69	36101.88	0.24871	0.27174	0.1194	0.0677
	양산시	25173.16	28417.62	0.19267	0.21464	0.05	0.0686
	의창구	28642.82	31362.7	0.23863	0.25949	0.0682	0.0549
	성산구	30579.7	34105.91	0.24912	0.27616	0.0481	0.0409
	마산합포구	27774.79	31356.35	0.22287	0.23924	0.0444	0.1075
	마산회원구	27428.49	30407.3	0.21462	0.23628	0.0578	0.0364
	진해구	27642.51	32268.9	0.2176	0.24257	0.1212	0.1154
	의령군	22519.89	25573.64	0.15493	0.17102	0	0
	함안군	25842.28	29363.34	0.19128	0.20941	0.0962	0.2389
	창녕군	25044.22	28256.58	0.19014	0.20541	0.1097	0.1234

시·도	시·군	소득('09)	소득('16)	지니계수('09)	지니계수('16)	비유사성 지수('09)	비유사성 지수('16)
	고성군	25668.6	29614.11	0.18899	0.2048	0.0404	0.0741
	남해군	23806.93	26203.87	0.17019	0.192	0.0736	0.0808
	하동군	27471.79	31419.39	0.21237	0.23552	0.1968	0.2476
	산청군	27150.47	30762.9	0.20124	0.22993	0.1502	0.4142
	함양군	27213.74	30354.38	0.19758	0.24822	0	0
	거창군	27226.66	29036.38	0.20963	0.23557	0	0
	합천군	26314.08	29168.01	0.19594	0.21996	0.0098	0.0397
제주	제주시	27825.43	32099.99	0.23827	0.274	0.0971	0.1139
	서귀포시	25502.22	28531.82	0.20738	0.22557	0.0839	0.1874

부표2 | 시도·시 군별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서울	종로구	2.26204	13.99946	0.032104
	중구	1.86586	20.4407	0.032128
	용산구	2.77913	30.27512	0.034525
	성동구	4.45008	17.01254	0.017635
	광진구	2.6153	14.37606	0.025897
	동대문구	2.95822	13.67087	0.016154
	종랑구	2.29396	10.60407	0.013706
	성북구	1.76995	13.23645	0.016726
	강북구	0.238655	11.13953	0.009163
	도봉구	1.82329	7.962354	0.015749
	노원구	2.17075	8.969862	0.016822
	은평구	2.02212	13.73886	0.014607
	서대문구	3.77189	11.81755	0.018334
	마포구	4.75714	18.47308	0.027577
	양천구	1.43122	9.989844	0.016772
	강서구	4.38112	12.76456	0.018298
	구로구	3.42389	12.72013	0.014252
	금천구	4.28661	12.65591	0.021418
	영등포구	2.61439	15.72958	0.014154
	동작구	1.12403	17.59584	0.019622
	관악구	1.42681	12.01332	0.01791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서초구	3.50848	22.63151	0.050141
	강남구	2.67135	15.21239	0.038032
	송파구	4.55622	13.80781	0.042944
	강동구	3.40352	9.449374	0.02621
부산	중구	0.790427	10.09086	0.017049
	서구	1.1498	11.9353	0.011137
	동구	0.114169	13.70675	0.027961
	영도구	1.26352	9.345247	0.038291
	부산진구	2.19217	11.93654	0.01264
	동래구	1.28704	11.94567	0.009131
	남구	2.06435	17.28627	0.013332
	북구	2.25258	11.74627	0.015203
	해운대구	5.7606	11.16138	0.009188
	사하구	0.90884	10.70654	0.011464
	금정구	2.79831	10.87409	0.02032
	강서구	8.35747	31.39043	0.023168
	연제구	1.53022	14.23684	0.016871
	수영구	2.62898	11.46267	0.012139
	사상구	0.597562	10.12733	0.006197
	기장군	10.0541	20.53177	0.017217
대구	중구	2.15762	11.38534	0.015465
	동구	3.52428	12.02378	0.027903
	서구	1.40201	11.04585	0.007942
	남구	2.52444	10.5645	0.021097
	북구	2.54211	10.79452	0.006663
	수성구	2.02299	11.94139	0.019626
	달서구	2.4012	9.073963	0.020297
	달성군	7.29771	13.41341	0.009302
인천	중구	4.7941	16.29213	0.033198
	동구	1.96575	11.93168	0.036563
	남구	2.14516	10.73458	0.009488
	연수구	9.16882	11.35867	0.039522
	남동구	3.38543	12.3293	0.016312
	부평구	1.27361	10.40009	0.008454
	계양구	2.27174	9.915798	0.01953
	서구	4.69554	12.46979	0.0059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강화군	1.99165	4.547043	0.018011
	옹진군	7.16785	35.33834	0.035345
광주	동구	1.42491	10.81213	0.014708
	서구	2.81502	11.65691	0.02994
	남구	3.40866	11.16613	0.014393
	북구	1.42117	10.59455	0.02729
	광산구	4.26579	15.57899	0.010623
대전	동구	2.65919	11.65168	0.018898
	중구	2.47695	12.66381	0.012352
	서구	3.22075	11.00337	0.015614
	유성구	6.37828	17.61101	0.007193
	대덕구	1.95436	10.91719	0.009945
울산	중구	3.6903	15.23695	0.024199
	남구	2.67876	13.3654	0.014062
	동구	2.4955	16.29866	0.074934
	북구	3.48407	15.87371	0.014721
	울주군	6.14865	13.69827	0.014665
세종	세종시	18.3275	22.48669	0.020907
경기도	장안구	2.55299	12.35513	0.023442
	권선구	4.5536	13.28066	0.014246
	팔달구	2.67853	13.58599	0.018127
	영통구	4.49031	18.79922	0.071508
	수정구	1.79732	7.460509	0.016242
	중원구	2.41494	13.16237	0.020737
	분당구	8.55189	14.0083	0.02044
	의정부시	2.057	9.825333	0.018176
	만안구	1.81185	10.20952	0.016802
	동안구	2.91137	10.8121	0.015797
	부천시	2.20872	11.07387	0.008144
	광명시	4.00187	14.33978	0.016349
	평택시	3.85129	14.81251	0.006583
	동두천시	2.15341	11.72118	0.008303
	상록구	3.38626	9.917421	0.011235
	단원구	3.20678	10.55418	0.025192
	덕양구	3.663	10.90868	0.03022
	일산동구	5.24342	11.33936	0.007202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일산서구	3.29916	9.35603	0.024297
	과천시	0.00564	8.103636	0.041522
	구리시	2.95128	11.36821	0.019922
	남양주시	6.65228	10.73886	0.020445
	오산시	5.49933	16.84204	0.023647
	시흥시	3.6721	10.95455	0.018024
	군포시	2.18529	12.33775	0.012665
	의왕시	5.58025	12.26894	0.019392
	하남시	5.27566	6.2663	0.026946
	처인구	4.02379	12.26454	0.017807
	기흥구	5.17619	13.03085	0.033724
	수지구	6.22462	12.784	0.019986
	파주시	7.57156	12.66508	0.02543
	이천시	5.11053	20.36683	0.013621
	안성시	4.25267	15.16897	0.029478
	김포시	6.66658	13.59315	0.027699
	화성시	8.37328	19.92151	0.017644
	광주시	4.97888	10.53282	0.027758
	양주시	3.24345	10.72858	0.020101
	포천시	4.48831	10.69256	0.005118
	여주시	2.32902	15.5374	0.023854
	연천군	1.74268	16.0036	0.026383
	가평군	2.72458	13.30721	0.014589
	양평군	3.67209	9.05637	0.022817
강원도	춘천시	3.36631	11.13455	0.009497
	원주시	4.87296	12.48419	0.020681
	강릉시	2.35052	10.76466	0.017012
	동해시	1.04458	13.46244	0.008501
	태백시	1.65193	13.54575	0.018085
	속초시	3.48983	9.225356	0.015186
	삼척시	3.46062	14.3655	0.031625
	홍천군	3.94297	17.08736	0.030092
	횡성군	4.13688	11.43441	0.030244
	영월군	1.5424	8.79413	0.018763
	평창군	2.65573	10.9601	0.03036
	정선군	1.64463	20.17198	0.031078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철원군	3.07811	16.69523	0.020169
	화천군	5.88309	26.77478	0.031708
	양구군	1.69832	26.75782	0.030772
	인제군	2.97533	29.74725	0.034394
	고성군	3.13095	15.08942	0.028487
	양양군	1.33475	14.18978	0.026143
충청북도	충주시	4.45015	11.78674	0.0246
	제천시	3.25775	11.99628	0.0148
	상당구	-0.788457	11.49	0.001652
	서원구	3.9937	11.83536	0.006987
	흥덕구	2.07291	14.38315	0.01123
	청원구	6.72186	17.72276	0.001074
	보은군	1.77933	10.63294	0.038232
	옥천군	1.34614	9.946521	0.012303
	영동군	2.90665	12.67542	0.012959
	증평군	5.35048	17.46497	0.015878
	진천군	3.57952	13.77761	0.009897
	괴산군	6.95611	16.47391	0.035624
	음성군	2.5392	9.589709	0.018496
	단양군	3.08489	15.65609	0.016702
충청남도	동남구	4.03573	13.77061	0.01235
	서북구	3.94073	18.20095	0.012954
	공주시	2.77375	9.801239	0.010266
	보령시	2.69362	12.74551	0.015156
	아산시	7.13427	23.99883	0.021976
	서산시	5.49701	20.18443	0.016336
	논산시	2.49603	11.0407	0.0187
	계룡시	3.99614	9.862795	0.016345
	당진시	9.07995	26.45809	0.032584
	금산군	3.75568	14.80034	0.017003
	부여군	1.07723	10.47228	0.020586
	서천군	1.72779	12.12346	0.016028
	청양군	4.43428	9.699749	0.027273
	홍성군	5.25206	17.81269	0.019553
	예산군	4.62828	9.73469	0.018414
	태안군	3.00624	13.94798	0.02122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전라북도	완산구	3.83879	10.68309	0.009514
	덕진구	3.22651	11.95581	0.013695
	군산시	2.50218	13.6595	0.012185
	익산시	2.08782	10.45777	0.01063
	정읍시	2.82019	11.45731	0.010778
	남원시	1.67847	9.015338	0.012888
	김제시	3.01537	9.060343	0.012234
	완주군	7.08922	23.08591	0.033382
	진안군	4.36384	11.01998	0.027481
	무주군	1.9646	20.03919	0.028057
	장수군	1.68311	14.55782	0.025723
	임실군	3.32153	13.37066	0.025155
	순창군	3.24721	11.05523	0.025017
	고창군	3.72269	11.75831	0.016199
	부안군	2.8491	4.889504	0.026939
전라남도	목포시	1.48521	10.75028	0.013349
	여수시	3.35508	12.4519	0.006766
	순천시	3.41708	11.24361	0.019802
	나주시	6.89738	14.07148	0.084561
	광양시	2.24202	12.27872	0.009826
	담양군	3.22512	10.74579	0.051434
	곡성군	2.33011	-13.18837	0.029605
	구례군	2.53064	13.47583	0.021047
	고흥군	2.85572	15.23418	0.026111
	보성군	3.44881	12.8329	0.021946
	화순군	1.69913	10.6941	0.035087
	장흥군	3.34997	13.67374	0.022408
	강진군	2.84207	10.91236	0.013249
	해남군	0.992491	11.81146	0.052412
	영암군	6.08276	18.8799	0.049953
	무안군	6.07966	18.31538	0.02623
	함평군	3.18477	6.959263	0.047277
	영광군	1.651	10.9388	0.027431
	장성군	4.39176	21.80427	0.021195
	완도군	3.22248	12.72666	0.019305
	진도군	3.38699	0.482277	0.05385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경상북도	신안군	2.54579		0.020085
	남구	1.41195	12.93231	0.013306
	북구	2.44767	10.22447	0.026537
	경주시	3.85717	10.68961	0.009209
	김천시	4.43624	9.984663	0.037262
	안동시	2.39837	10.89333	0.023925
	구미시	3.15207	16.57783	0.022804
	영주시	3.03347	10.68695	0.010674
	영천시	4.52811	10.11272	0.01249
	상주시	3.26976	9.563298	0.019136
	문경시	2.8939	9.511255	0.020078
	경산시	4.77607	9.957215	0.00956
	군위군	3.55938	15.63363	0.032553
	의성군	1.92004	15.56683	0.021564
	청송군	2.00676	18.94932	0.023604
	영양군	1.88663	35.00569	0.058538
	영덕군	1.38932	12.27545	0.026274
	청도군	4.57997	6.376738	0.031499
	고령군	5.38044	12.05046	0.0219
	성주군	6.21209	8.549882	0.034707
	칠곡군	4.64897	20.3003	0.015488
	예천군	1.72476	8.21954	0.010349
	봉화군	2.49324	13.73945	0.036168
	울진군	3.2003	24.86462	0.017599
	울릉군	1.21687		0.024899
경상남도	진주시	2.85044	11.60196	0.010733
	통영시	-0.076025	16.06913	0.051921
	사천시	3.86557	20.75108	0.01585
	김해시	3.55981	13.8129	0.015138
	밀양시	3.37352	8.469569	0.010555
	거제시	3.07431	21.98357	0.029831
	양산시	4.80039	12.88855	0.013845
	의창구	2.00943	9.495861	0.018749
	성산구	2.17907	11.53123	0.017312
	마산합포구	2.84699	12.895	0.009588
	마산회원구	1.06198	10.86025	0.009594

시·도	시·군	고용증가율	소득증가율	불안정성
	진해군	1.63328	16.73652	0.015422
	의령군	1.0713	13.56023	0.027224
	함안군	5.5916	13.62519	0.010436
	창녕군	5.40374	12.82675	0.019336
	고성군	1.13199	15.37097	0.058495
	남해군	2.27886	10.06826	0.010486
	하동군	2.07454	14.36962	0.014866
	산청군	4.9292	13.30524	0.06088
	함양군	0.234533	11.54064	0.02589
	거창군	2.54593	6.646845	0.019615
	합천군	0.849074	10.84561	0.028879
제주	제주시	3.59728	15.36208	0.02783
	서귀포시	4.17752	11.87976	0.012038

기본 18-20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진 홍사흠, 문정호, 남기찬, 김다윗, 김동현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2018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7,000

I S B N 979-11-5898-409-0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1503

홈페이지 www.krihs.re.kr

© 201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홍사흠, 문정호, 남기찬, 김다윗, 김동현, 2018.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Growth, Stability, and Inclusion in Regions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제3장 지역경제 포용성 및 성과의 측정

제4장 지역경제 포용성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

제5장 정책적 활용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